

1 행정학의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행정현상을 관찰가능한 객관적인 대상으로 보며, 인간의 주관이나 의식을 배제하고 행태의 규칙성, 상관성 및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하려 한다.
- ② 현상학적 접근방법은 행정현상이 사람들의 의식, 생각, 언어, 개념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주관적인 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③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은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 시민을 공공재의 소비자라고 규정하며, 방법론적 전체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 ④ 생태론적 접근방법은 행정현상을 자연적·사회적·문화적 환경과 관련시켜 이해하려고 한다.
- ⑤ 체제론적 접근방법은 행정현상을 포괄적인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이라고 파악하여 통합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해설

③ (×) 방법론적 전체주의 ⇨ 방법론적 개인(개체)주의

공공선택모형은 이기적인 개인들(투표자, 관료, 이익집단, 정치인)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어떻게 정치적·경제적으로 행동하는지를 연구하여 정부실패를 설명하는 모형으로서 방법론적 개인주의(환원주의,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취한다. 방법론적 전체주의(유기체적 접근, 방법론적 신비주의, 우주론적 접근, 총체주의)가 아니다.

답 ③

[관련기출] 행정학의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 국가7급

- ① 현상학적 접근방법은 행정현상이란 그 속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식, 생각, 언어, 개념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 주관적인 경험으로 이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주관적 관념, 의식 및 동기 등의 의미를 더 적절하게 다루고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 ②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행정현상을 관찰 가능한 객관적인 대상으로 보며 인간의 주관이나 의식을 배제하고 행태의 규칙성, 상관성 및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하려 한다.
- ③ 생태론적 접근방법은 행정현상을 자연적·사회적·문화적 환경과 관련시켜 이해하려고 하며 행정체제의 개방성을 강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행정환경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경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④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은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 시민을 공공재의 소비자라고 규정하고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은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방법론적 전체주의 입장을 취한다.

답 ④

2 정책평가에서 내적 타당성의 저해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발 요인 ② 회귀인공 요인 ③ 성숙 요인 ④ 호손효과 요인 ⑤ 측정수단 요인

해설

정책평가의 타당성 저해요인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	표본의 무작위배정 및 대표성 관련요인	선발(선정)요인	외재적 요인
		상실(탈락)요인, 회귀인공요인(실험직전반응효과)	내재적 요인
	대상집단의 특성변화	성숙(성장)요인, 사건(역사)요인	
	관찰 및 측정 관련요인	측정수단(측정도구)요인, 측정(검사·조사·시험)요인	
	비교집단 간의 상호작용	오염·확산(누수[누출], 모방, 부자연스런 반응)	
	복합요인 - 단일 요인들의 상호작용	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	외재적 요인 + 내재적 요인
선정과 성숙의 상호작용, 선정과 사건의 상호작용			
외적 타당성 저해요인	① 호손효과(실험조작의 반응효과)		

※ 크리밍 효과는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도 될 수 있음(선정요인과 유사).

답 ④

[관련기출]

1.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2007 서울9급

- ① 역사요인 ② 성숙요인 ③ 호손효과 ④ 선발효과 ⑤ 측정도구의 변화

2. 정책평가에서 내적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은?

2011 서울7급

- ① 역사적 효과 ② 통계적 회귀 ③ 측정도구의 변화 ④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⑤ 실험조작의 반응효과

3. 다음 중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2010 국회8급
㉠ 역사요인 ㉡ 회귀인공요인 ㉢ 실험조작의 반응효과 ㉣ 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 ㉤ 측정요인 ㉥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 측정도구요인 ㉧ 표본추출의 대표성 문제 ㉨ 다수 처리의 간섭 ㉩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① 2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⑤ 8개	
4. 다음 내용에서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2021 해경승진
㉠ 역사요인 ㉡ 회귀인공요인 ㉢ 실험조작의 반응효과 ㉣ 측정도구요인 ㉤ 다수 처리의 간섭 ㉥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5.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만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2020 경정승진
①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표본추출의 대표성 문제, 역사요인, 측정도구요인 ② 역사요인, 표본추출의 대표성 문제,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선발요인 ③ 회귀인공요인, 크리밍 효과, 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 역사요인,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④ 역사요인, 회귀인공요인, 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 측정도구요인	
6.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2008 국회8급
① 선발요소 ② 역사요소 ③ 성숙효과 ④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⑤ 통계적 회귀요소	
7.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2007 국가9급
① 성숙효과(maturation effect) ② 무작위 배정(random assignment) ③ 측정도구의 효과(instrumentation effect) ④ 역사효과(history effect)	
8.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2017 경정승진
① 측정수단요소 ② 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 ③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④ 통계적 회귀	
답 1. ③ 2. ⑤ 3. ④ 4. ① 5. ④ 6. ④ 7. ② 8. ③	

3 총체주의 예산이론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 예산은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다.	
㉡ 예산과정을 행정부와 의회의 선형적 함수관계로 파악한다.	
㉢ 예산은 한계효용 개념을 이용한 상대적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 참여자 간의 합의를 중시한다.	
㉤ 예산의 규모는 사회후생 극대화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해설
㉠㉢㉤은 합리모형의 특징. 합리모형은 합리적이고 분석적 과정을 강조하며,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해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꾀한다. 자원(예산) 한 단위를 추가로 배분할 때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용인 한계효용이 큰 사업에 배분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은 점증모형의 특징 ㉣ 점증주의적 예산결정은 다수의 참여자들 간 고리형의 상호작용을 통한 합의와 선형적 관계를 중시한다. 의회와 행정부 간 또는 기관 간 선형적(線形的)·안정적·규칙적 함수관계를 보인다. 즉 행정부처는 전년도 의회의 승인액을 참작하여 결정하고 의회는 행정부처의 요구액을 기초로 심의하므로 행정부나 의회의 예산결정에 있어 선형성(linearity)과 안정성(stability)이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기존 예산의 큰 변화나 수정은 없다. ㉤ 점증모형은 정치적 협상·타협, 상호조정 및 합의된 결정절차, 참여적 결정을 강조한다. 합리모형은 분석적 기법, 계획된 행동, 체계적 결정, 계량적 모형의 이용을 강조한다.
답 ②

[관련기출]	
1. 예산결정 모형 중 합리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끼리 짝지은 것은?	2012 해경간부 / 2002 행정고시
㉠ 예산은 한계효용개념을 이용한 상대적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 예산과정을 행정부와 의회의 선형적 함수관계로 파악한다. ㉢ 예산은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다. ㉣ 예산은 정부기관, 관료, 의원 및 관련 집단 간 갈등의 원만한 해결에 의해서 결정된다. ㉤ 예산의 규모는 사회후생 극대화 기준에 의해서 결정된다. ㉥ 참여자 간의 합의를 중요시한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2. 점증주의적 예산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지방9급(하)
① 현상유지(status quo)적 결정에 치우칠 수 있다. ② 자원이 부족한 경우 소수기득권층의 이해를 먼저 반영하게 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③ 다수의 참여자들 간 고리형의 상호작용을 통한 합의를 중시하는 합리주의와는 달리 선형적 과정을 중시한다. ④ 긴축재정 시의 예산행태를 잘 설명해주지 못한다.	

해설

2. ① (○) 점증주의는 정치적 실현가능성과 정책결정체제의 안정성만 중시하여 현존 상태를 옹호하는 현상유지(status quo)나 보수주의적 성격이 강하여 행정개혁이 필요한 시기에는 점증주의가 개혁에 대한 저항이나 관료병리로 평가될 수 있다. 쇄신적 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기본 정책의 전환이 불가피할 경우 점증주의로는 곤란하다.
- ② (○) 모든 이해관계자의 정치적 자원이 비슷하게 배분된 사회가 아닌 경우 권력·영향력이 강한 집단이나 강자에게 유리하고 약자에게 불리하며, 자원이 부족한 경우 소수기득권층의 이해를 먼저 반영하게 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기득권 세력을 옹호하고 자원배분의 불공평을 고착화시키며 비조직화된 이익을 반영하기 곤란하므로 다원주의의 미명 하에 소수 엘리트의 지배를 초래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 ③ (×) 선형적 과정(예산결정의 일정한 일련의 단계)을 중시하는 합리모형과는 달리 점증주의는 다수의 참여자들 간에 고리형(복잡하게 얽혀있는 이해관계)의 상호작용을 통한 합의를 중시한다(유민봉 교수).

■ '선형'이란 표현이 나오면 앞뒤의 수식어와 맥락을 연결하여 옳은 지문인지 판단해야 함.

- ① 규칙성, 안정성, 경향성을 의미하는 경우(일정 방향으로 큰 폭의 변동 없이 예측가능하게 변화하는 것) 예 점증주의는 의회와 행정부 간 또는 기관 간 선형적(線形的)·안정적·규칙적 함수관계를 보인다. 행정부처는 전년도 의회의 승인액을 참작하여 결정하고 의회는 행정부처의 요구액을 기초로 심의하므로 행정부나 의회의 예산결정에 있어 선형성(linearity)과 안정성(stability)이 강하게 나타난다.
- ② 일정한 일련의 단계성을 의미하는 경우 예 합리주의는 합리적·분석적 단계를 거쳐 예산이 결정되는 선형적 과정을 중시한다. '문제의 확인 및 목표의 정의 → 대안 탐색·개발 → 대안의 결과 예측 → 대안의 비교·평가 → 최적 대안 선택 → 선택된 대안에 대한 예산배분'이라는 일정한 단계를 거친다.
- ④ (○) 점증주의는 정치적 반대를 고려하므로, 축소·종결이 힘들고 '눈덩이 굴리기식 결정'이 이루어져 감축관리가 곤란하여 긴축재정 시의 예산행태를 잘 설명해줄 수 없다. 경제가 순조롭게 성장하는 시기에는 적합하나 경기침체기나 예산감축기에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강조되는 거시적·합리적 예산결정이 필요하며 예산을 전체보다 부분에 초점을 맞추며 상향적 한계적 예산조절과정으로 파악하는 미시적 예산결정인 점증주의는 적용하기 곤란하다.

답 1. ③ 2. ③

4 다음 제시문이 설명하는 정책분석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예측을 하는 데있어서, 하나의 문제를 더 작은 구성요소로 분해하고, 이 요소들을 둘씩 짝을 지어 비교하는 일련의 비교판단법이다. 이러한 비교판단을 통해 각 요소들의 영향력에 대한 상대적인 강도와 효용성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 ① 외삽법(Extrapolation) ② 정책델파이방법(Policy Delphi Method)
 ③ 교차영향행렬(Cross Impact Matrix) ④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⑤ 계층화분석법(Analytical Hierarchy Process)

해설

• 계층화분석법(analytical hierarchy process) : 시스템이론에 기초하여 하나의 문제를 시스템으로 보고 여러 개의 계층으로 분해한 다음 각 계층별로 복수의 평가기준(구성요소)이나 대안들을 설정하여 네트워크 형태로 구조화하고 각 계층의 요소들이 상위계층의 평가기준을 얼마나 만족시키는지 둘씩 짝을 지어 비교하고 대안들의 상대적 선호도나 중요도를 숫자로 전환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각 대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적대안을 선택하는 기법이다. 1970년대 초 새티(T. Saaty)가 개발하였으며 우리나라도 2000년부터 정부사업의 예비적 타당성 조사에 다기준분석방법이라는 이름으로 개발·활용되고 있다.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의 통합, 다기준(多基準) 의사결정문제에 효과적으로 적용, 확률(probability) 대신에 우선순위(priority) 사용 등의 특징을 갖는다.

답 ⑤

[관련기출] 다음이 설명하는 정책분석방법은?

2011 국가7급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문제를 더 작은 구성요소로 분해하고, 이 요소들을 둘씩 짝을 지어 비교하는 일련의 비교판단을 통해, 각 요소들의 영향력에 대한 상대적인 강도와 효용성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 ① 계층화분석법(analytical hierarchy process) ② 교차충격매트릭스방법(cross impact matrix)
 ③ 정책델파이방법(policy delphi method) ④ 외삽법(extrapolation)

답 ①

5 정부규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른 것은?

- ㉠ 관리규제란 정부가 피규제자가 만든 목표 달성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그 이행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이 대표적 예이다.
- ㉡ 포지티브규제는 원칙 허용, 예외 금지를 의미 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이 자유롭다.
- ㉢ 포획이론은 정부가 피규제자에게 포획됨으로써 일반 시민이 아닌 특정 집단의 사익을 옹호한다고 말한다.
- ㉣ 윌슨(Wilson)의 규제정치이론에 따르면, 고객정치 상황에서는 응집력이 강한 소수의 편익 수혜자와 소수의 비용 부담자가 격렬하게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 ㉤ 규제피라미드는 규제를 지키지 않는 행위를 막기 위해 또 다른 새로운 규제가 반복해서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해설

㉠ (○) 규제의 대상에 의한 분류 : 수단규제, 성과규제, 관리규제

구분	수단규제 - 투입규제	성과규제 - 산출규제	관리규제(regulatory management) - 과정규제
의의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에 대해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	정부가 특정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목표달성 수준을 정하고 피규제자에게 이를 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	수단·성과가 아닌 과정을 규제하는 것으로, 정부는 피규제자가 만든 규제목표 달성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그 이행을 요구
사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특정 유형의 환경통제기술 사용을 요구, 작업장 안전을 위한 안전장비 착용의 의무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규제, 인체건강을 위해 개발된 신약에 허용가능한 부작용 발생 수준을 요구하는 것. 오염물질 배출량 통제	식품안전을 위해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에 기초하여 피규제자가 체계적인 위생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
평가	- 정부의 규제 정도와 피규제자의 순응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용이 - 정책목표와 무관한 수단규제를 도입하면 불필요한 규제준수 비용을 유발시킬 수 있음.	- 수단규제에 비해 피규제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정책목표 달성 가능. -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최적의 성과 수준을 찾는 것이 어려움.	- 수단규제에 비해 피규제자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며, 피규제자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할 수 있음. - 성과 측정이 아니라 피규제자가 설계한 내용이 제대로 집행되는가를 평가하면 되기 때문에 성과 측정이 어려울 때 이용할 수 있음.

㉡ (×)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 허용·예외 금지’의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을 허용한다.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 금지·예외 허용’의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을 금지한다. 오늘날 규제개혁 방향은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통해 규제를 완화한다.

■ 규제의 개입 범위 : 네거티브 규제와 포지티브 규제

구분	포지티브(positive) 규제	네거티브(negative) 규제
특징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사전규제 예 주로 허가제·인가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사후규제 예 주로 신고제·등록제
법 규정 형식	~할 수 있다. ~이다. -허용 사항 명시 (특정 행위만 허용, 나머지는 금지)	~할 수 없다. ~가 아니다. -금지 사항 명시 (특정 행위만 금지, 나머지는 허용)
입증책임	피규제자가 규제법규 준수를 입증	규제기관이 규제법규 위반을 입증
효과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더 제약됨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더 보장됨

㉢ (○) 포획은 규제주체(행정관료)가 다수 국민의 이익을 외면하고 금전적인 이익에 의해 피규제기관(이익집단, 기업)에게 포섭되어 피규제기관의 요구나 주장에 동조·호응하는 현상으로 공익보다는 사익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게 된다.

㉣ (×) 응집력이 강한 소수의 편익 수혜자와 소수의 비용 부담자가 격렬하게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익집단모형임.

• **고객의 정치(client politics)** : 규제비용은 상대적으로 작고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부담되지만 규제의 편익이 크고 동질적인 소수에게 귀속되는 정치적 상황에서 수혜자집단의 집단행동은 강화되고, 비용부담집단의 집단행동은 완화되는 유형. 소수 수혜자 집단은 잘 조직화되어 규제기관의 정책형성 및 집행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들의 편익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고, 정부관료(규제기관)가 이익을 받게 되는 소수 수혜자집단(피규제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Agent)을 수행하는 지대추구현상(rent seeking)이나 포획현상(capture)이 강하게 나타나고, 양자 간 공생관계를 보이며, 전체 국민의 공익은 저해될 수 있다. 정부규제 도입 과정에서 조용한 막후교섭과 로비가 나타나며 소비자단체 등 공익집단의 항의나 반박이 없는 한 별다른 논란의 여지가 없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 J. Q. Wilson의 규제정치모형

		감지된 규제의 편익(수혜자집단)	
		높은 수준으로 집중(특정 소수)	낮은 수준으로 분산(불특정 다수)
감지된 규제의 비용 (비용부담집단)	높은 수준으로 집중 (특정 소수)	이익집단정치(interest - group politics) 예 의·약분업, 한·약규제, 노사관계규제, 중소기업고유 업종규제	기업가적 정치(entrepreneurial politics ; 운동가의 정치) 예 환경오염규제, 자동차안전규제, 산업안전규제, 유해성 물품에 대한 위생규제, 원자력발전 안전규제
	낮은 수준으로 분산 (불특정 다수)	고객의 정치(client politics) 예 진입규제(의사·변호사 등 직업면허, 인·허가제도), 농산물 최저가격규제, 수입규제	대중정치(majoritarian politics ; 다수의 정치) 예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낙태·종교활동에 대한 규제, 신문·방송·출판물 등 언론에 대한 윤리규제, 사회보장법, 음란물 규제,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등

㉤ (○) 규제의 무분별한 확대와 관련된 용어

- ㉠ Bardach와 Kagan의 규제의 조임쇠(Regulatory Ratchet) : 정부규제는 일단 만들어지면 증가만 하고 줄어들지 않음.
- ㉡ Mckie의 끈끈이 인형효과(Tar Baby Effect) : J. Harris의 소설에서 토끼를 유혹하기 위해 사용되는 타르 인형에서 유래된 말로 토끼들이 타르를 칠한 인형을 친구로 착각해 주변에 모여들게 되듯이, 잘못된 정부규제가 다른 정부규제를 불러오는 현상을 지칭.
- ㉢ 풍선효과(balloon effect) : 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볼거져 나오는 것처럼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추가로 발생하는 효과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규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 매춘영업장 단속 강화 ⇨ 유사 성행위 업소 증가
- ㉣ 규제의 피라미드(Regulation Pyramid) : 규제가 규제를 낳아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점점 증가하는 현상.

답 ②

[관련기출]

1.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 국회8급

- ① 관리규제란 정부가 특정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목표달성 수준을 정하고 피규제자에게 이를 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 ② 규제의 역설은 기업의 상품정보공개가 의무화될수록 소비자의 실질적 정보량은 줄어든다고 본다.
- ③ 포획이론은 정부가 규제의 편익자에게 포획됨으로써 일반 시민이 아닌 특정집단의 사익을 옹호하는 것을 지적한다.
- ④ 지대추구이론은 정부규제가 지대를 만들어 내고 이해관계자집단으로 하여금 그 지대를 추구하도록 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 ⑤ 윌슨(J. Wilson)에 따르면 규제로부터 감지되는 비용과 편익의 분포에 따라 각기 다른 정치경제적 상황이 발생된다.

2. 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 지방7급
① 윌슨(Wilson)의 규제정치이론에 따르면, 고객정치 상황에서는 응집력이 강한 소수의 편익 수혜자의 논리가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②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 허용·예외 금지'의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을 허용한다. ③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정부 규제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 국회8급
① 관리규제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성과 기준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는 수단과 방법의 선택은 피규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수단규제에 비해 피규제자가 많은 자율성을 갖는다. ② 수단규제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에 대해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투입규제라고도 한다. ③ 공동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집단에 의해 이뤄지는 규제로 자율규제와 직접규제의 중간 성격을 띤다. ④ 자율규제는 개인과 기업 등 피규제자가 스스로 합의된 규범을 만들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적용하는 형태의 규제이다. ⑤ 네거티브 규제 방식에서는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4. 다음 중 규제피라미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8 국회8급
① 새로운 위험만 규제하다 보면 사회의 전체 위험 수준은 증가하는 상황 ②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낳은 결과 피규제자의 비용 부담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상황 ③ 기업체에게 상품 정보에 대한 공개 의무를 강화할수록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정보량은 줄어들게 되는 상황 ④ 과도한 규제를 무리하게 설정하다 보면 실제로는 규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상황 ⑤ 소득재분배를 위한 규제가 오히려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상황	
답 1. ① 2. ② 3. ① 4. ②	

6 조직의 갈등관리 방법 중 해소전략에 속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 회피	㉡ 상위목표의 제시
㉢ 협상	㉣ 리더십 스타일의 변경
㉥ 인사이동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해설 ㉠, ㉡, ㉥은 갈등해소전략 / ㉢, ㉣은 갈등조장전략 ㉠ 회피(avoidance) :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보류·연기, 갈등당사자 간의 접촉 방지, 갈등행동의 억압(suppression). 단기적으로 갈등을 약화시키는 초보적 방어기제로서 갈등을 지연시키는 것이 목적이지만 갈등 원인이나 갈등 상황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본적인 갈등해결방안은 아님 ㉡ 협상(bargaining) : 당사자 간 1 대 1 직접적 교섭. 이해당사자 간 직접적 갈등해결방법으로서 직접적인 양보와 획득관계(더 큰 것을 얻기 위해 작은 것을 포기)에 의한 조정방법. ㉢ 상위목표(super ordinate goals) 제시 : 공동목표·상위목표에 입각하여 하위목표에 대한 이견 대립을 설득·조정(공동의 적 설정도 유사한 방법). 유사성·공동이익을 강조하고, 상이성을 비판. ㉣ 리더십 스타일의 변경 : 리더십의 유형을 바꿈으로써 구성원의 태도 변화를 야기함 ㉥ 인사정책적 방법 - 구성원의 이질화(heterogeneity) : 기존 구성원과 상이한 배경·경험·가치관을 지닌 새로운 구성원을 충원. 고정관념과 경직된 사고방식, 편협한 가치관, 침체된 지향성과 행태를 불식시키는 데 유용.	
갈등관리전략 : 갈등해소·완화전략과 갈등조장·촉진전략	
갈등해소·완화전략 ① 대면에 의한 문제해결(problem solving) ② 타협(compromise) : ㉠ 협상(bargaining), ㉡ 제3자에 의한 중재 ③ 설득, 상위·공동 목표(super ordinate goals) 제시 ④ 회피(avoidance) ⑤ 완화(smoothing) ⑥ 아이디어에 의한 조정(Gulick) ⑦ 정략(politics) ⑧ 자원의 증대 ⑨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 완화 ⑩ (상관의) 권위적 명령(계층적·공식적 권위를 이용한 조정) ⑪ 인간적 변수의 변화 - 갈등당사자 태도변화 훈련(행태변화)-OD ⑫ 구조적 요인의 개선 : 인사교류(순환보직 ; job rotation), 조정담당직위·기구 신설, 이의제기 제도, 갈등중인 조직단위의 합병(대국·대과주의), 지위체제 개편, 업무분배 변경, 보상체계 개편, 의사전달 촉진. ⑬ 공동의 적 제시 ⑭ 회의·위원회에 의한 조정(수평적 갈등의 조정), 리더십의 활용	갈등조장·촉진전략 ① 공식적·비공식적 의사전달통로를 의도적으로 변경하여 정보 및 권력을 재분배 ② 경쟁 상황 창출(경쟁의 조성) ③ 제도적 갈등조장방법(조직 개편, 직무재설계) : 조직 내 수평적 분화를 통한 조직구조 변경(구조의 분화), 조직의 계층 수, 직위 간 관계·기능적 조직단위의 수 재설정, 계선·참모 간 갈등의 적절한 활용 ④ 정보전달의 통제(정보량 조절 ; 정보전달 억제나 과잉노출) ⑤ 인사정책적 방법 - 구성원의 이질화(heterogeneity) ⑥ 충격요법적 방법 : 외부집단의 도전이나 위협을 느끼도록 유도 ⑦ 의사결정권의 재분배 ⑧ 리더십 유형의 적절한 교체(리더십 스타일 변경)

답 ①

[관련기출]

1. 갈등관리의 방법을 갈등 해소 전략과 갈등 조성 전략으로 나눌 때, 다음 중 갈등 조성 전략만으로 묶인 것은?

2017 국회9급

- ① 공동의 적 확인, 상관의 명령 ② 상위목표의 제시, 구조적 요인의 개편
③ 회피, 직위 간의 관계 재설정 ④ 구조의 분화, 의사전달통로의 변경
⑤ 자원의 증대, 정보전달 억제

2. 조직관리에 있어 집단이나 부서 간 갈등 해소는 중요한 관리요소이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만 고른 것은?

2011 국가7급 경영학

㉠ 직접 대면 ㉡ 상위목표의 설정 ㉢ 자원의 확충 ㉣ 상호의존성 제고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ㄷ ④ ㄴ, ㄷ

3. 갈등관리전략 중 갈등해소전략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1 경찰승진

- ① 문제 해결 ② 상위목표 제시 ③ 자원의 증대 ④ 정보전달 억제

4. 다음 중 갈등의 조성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9 국회8급

- ① 표면화된 공식적 및 비공식적 정보전달통로를 의식적으로 변경시킨다.
- ② 갈등을 일으킨 당사자들에게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상위목표를 제시한다.
- ③ 상황에 따라 정보전달을 억제하거나 지나치게 과장한 정보를 전달한다.
- ④ 단위부서들 간에 경쟁상황을 조성한다.

5. 순기능적 갈등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0 국회8급

- ① 정보전달의 억제 또는 과도한 정보전달 ② 의사전달통로의 변경
③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연기 ④ 인사이동 또는 직위 간 관계의 재설정
⑤ 구조의 분화

답 1. ④ 2. ① 3. ④ 4. ② 5. ③

7

정책의제설정모형 중 동원형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이익집단들이 발달한 다원주의 정치체제에서 많이 나타난다.
- ② 정책확장이 정책에 대하여 특별한 지식이나 관심을 가진 집단들에 한하여 이루어진다.
- ③ 정부지도자들이 대중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관계 캠페인을 벌인다.
- ④ 쟁점의 확산과 진입에 있어 언론의 역할이나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 ⑤ 최고통치자나 고위정책결정자보다 낮은 직위의 관료가 의제형성을 주도한다.

해설

- ①④ (×) 외부주도형(Outside Initiative Model)의 특징이다.
- ② (×) 내부주도형(P. May) 또는 내부접근형(R. Cobb, J. Ross, M. Ross)에 대한 내용이다. 내부접근형은 정책결정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부기관 내의 관료집단이나 상당한 전문지식과 이해관계가 있는 정부기관 외부의 민간 전문가가 주도하여 최고결정자에게 간접하게 접근하여 문제를 정부 의제화하는 경우이다
- ③ (○) 동원형(Mobilization Model)은 정부 내에서 정책담당자(정부 내 최고정책결정자)의 주도로 정부의제가 채택되고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공중의 관심·지원 확보 목적으로 정부가 행정 PR을 통해 일반대중에게 정책의 중요성과 유용성을 적극적으로 이해시키고 설득하여 공중의 지지를 동원(공중의제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 ⑤ (×) 내부접근형이 동원형과 다른 점은 주도세력이 낮은 지위에 있는 고위관료이며, 공중의제화를 막으려 한다는 점이다.

구 분	주도자	공중의제화(개방성)	유사점
동원형	주도세력이 최고통치자나 고위 정책결정자	정부의제가 PR활동을 통해 공중의제화	정부의제화 용이
내부접근형	더 낮은 지위의 고위관료인 경우가 많음	공중의제화를 막고 대중에게 알리지 않음	공식적 참여자가 주도

③

[관련기출]

1. 정책의제설정 모형에 대한 설명 중 동원모형에 해당되는 것은?

2012 국가7급

- ① 정부지도자들이 대중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관계 캠페인(public relations campaign)을 벌인다.
- ② 정책확장이 정책과 관련된 주제에 대하여 특별한 지식이나 관심을 가진 집단들에 한정하여 이루어진다.
- ③ 심볼 활용(symbol utilization)이나 매스 미디어 등을 통해 쟁점이 확산된다.
- ④ 정책결정자들이 정치 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이슈를 공식적 정책의제로 채택하는 전략적 과정을 설명하는 논리이다.

2. 정책의제설정모형 중 동원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6 경정승진

- ① 민간의 지지가 높을 때 정부가 민간의 힘을 동원하는 모형이다.
- ② 이익집단이 아닌 전문가의 영향력이 크다.
- ③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부문의 힘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난다.
- ④ 정책담당자들이 공식적 의제로부터 대중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관계 캠페인을 벌인다.

답 1. ① 2. ①

8 다음 [표]에 제시된 재화와 서비스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성		경합성	
		높음	낮음
배제성	쉬움	㉠	㉡
	어려움	㉢	㉣

- ① ㉠은 시장에서 소비되는 재화로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자동적으로 조절된다.
 ② ㉡은 공동으로 소비하지만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기업 등이 주로 공급을 담당한다.
 ③ ㉢은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하는 재화로서 지나친 남용으로 인한 자원 고갈의 염려가 있다.
 ④ ㉣은 초기 구축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고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크기 때문에 비용체감산업의 특성이 있다.
 ⑤ ㉢과 ㉣은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해설

특성		경합성	
		높음(경합성)	낮음(비경합성)
배제성	쉬움(배제성)	㉠ 민간재·사적재	㉡ 요금재·유료재
	어려움(비배제성)	㉢ 공유재·공동소유재	㉣ 공공재·집합재

- ① (○) ㉠ 민간재의 경우 시장 가격기구에 의해 응익주의에 따라 수요·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문제가 없고, 원칙적으로 민간기업이 생산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한다. 다만, 공익차원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서비스의 안정성과 규격기준 설정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기본적 수요의 충족 등에 부분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가 있다.
 ② (○) ㉡은 공동으로 소비(비경합성=공동소비성)하지만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배제가 가능(배제성)한 요금재(유료재)이다. 요금재는 민간기업이 생산하도록 가능한 한 자율성을 보장하지만, 일부재화의 자연독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를 가하거나 직접 공급하며, 공급비용은 서비스 판매(유료)를 통해 조달된다. 이 경우 직접공급은 주로 공기업이 담당한다(예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③ (○) ㉢ 공유재는 과다사용과 자원손실(공유지의 비극)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④ (×) 초기 구축비용(고정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고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크기 때문에 비용체감산업의 특성이 있어서 자연독점이 나타날 수 있는 재화는 ㉣ 요금재이다.
 ⑤ (○) ㉢ 공유재나 ㉣ 공공재는 비배제성을 지니므로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재화의 유형별 특성 및 정부의 관여 형태

특 징	배제성(차별성·수익자부담·응익성[應益性])	비배제성(평등성·무임승차성)
경합성 (개별소비성, 분할가능성)	사적재(私的財)·사용재(私用財)·민간재(private goods) ① 예 : 일상생활의 재화(냉장고, 빵, 자동차 등) ② 공급상 문제점 : 시장 가격기구에 의해 응익주의에 따라 수요·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문제 없음. ③ 정부개입 : 원칙적으로 민간기업이 생산하도록 자율성을 보장, 공익차원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서비스의 안정성과 규격기준 설정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기본적 수요의 충족 등에 부분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가 있음.	공동소유재·공유재(common - pool goods) ① 예 : 자연자원(산, 강, 바다, 개울가 수석, 어족자원, 지하수, 천연자원, 관개용수(灌溉用水), 예산, 국립공원 등) ② 공급상 문제점 : ㉠ 과다사용과 자원손실(공유지의 비극), ㉡ 비배제성에 따른 비용 회피 ③ 정부개입 : ㉠ 자원고갈 방지를 위한 공급·소비에 대한 적극적 규제(예 환경오염 방지정책), ㉡ 공공부문에서의 공급비용 부담(예 정부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나 예방접종)
비경합성 (공동소비성, 비분할성)	요금재·유료재(toll goods) ① 예 : 전기, 가스, 수도, 통신, 상·하수도, 고속도로 ② 공급상 문제점 : 규모의 경제와 자연독점 우려 ③ 정부개입 : 민간기업이 생산하도록 가능한 한 자율성을 보장하지만, 일부재화의 자연독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를 가하거나 직접 공급하며, 공급비용은 서비스 판매(유료)를 통해 조달.	(순수)공공재(public goods), 집합재(collective goods) ① 예 : 국방·치안·외교·방역서비스, 도로·등대·가로등 ② 공급상 문제점 : 무임승차 ⇨ 시장에서 공급 곤란(과소공급) ③ 정부개입 : 공급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직접 공급(무료)하며(계약에 의해 민간기업이 생산할 수도 있음), 공급비용은 세금 등 강제적 수단으로 징수.

답 ④

9 행정의 가외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외성은 능률성을 제고하고 조직의 적응력을 높인다.
 ② 가외성이 전체의 신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조건은 각 부분이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③ 가외성은 대체수단의 확보 등으로 수단과 목표의 전도 현상을 완화시킨다.
 ④ 조직의 과업환경이 이질적이고 불확정적인 때에 가외적 구조를 가진 조직은 생존가능성이나 과업 성취가능성이 높다.
 ⑤ 기능이 중첩·중복되는 조직에서는 의견이나 이해관계가 달라 조직 간의 충돌가능성이 높다.

해설

- ① (×) 가외성은 불확실성에 대한 조직의 적응력을 높이지만,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므로 일반적으로 능률성·경제성을 저해한다.
- ② (○) 가외성이 체제 전체의 신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조건은 각 부분이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각 부서가 어느 정도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때로는 최고관리자의 잘못된 판단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목표와 의미를 공유하는 하위부서들이 다양한 가치를 분산적으로 추구하고 성취하게 되면 불확실성 속에서 조직의 적응력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 ③ (○) 가외성은 목표에 대한 맹종성 탈피, 융통성 부여를 통해 목표의 전환(displacement, 전도·대치·전치·도치·왜곡)을 완화시킴.
- ④ (○) 가외성 장치는 불확실성에 대한 소극적 대응장치로서 가외성의 산술적 증가는 실패확률을 지수적(기하급수적)으로 감소시키며 조직의 생존가능성이나 과업의 성취가능성을 높인다.
- ⑤ (○) 가외성 운용상 한계로서 기능중복에 의한 책임한계의 불명확성, 권한의 상충·갈등의 문제가 있다.

답 ①

[관련기출]

1. 가외성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2011 인천전환특채
 - ① 창조성을 높여준다.
 - ② 신뢰성을 높여준다.
 - ③ 능률성을 뒷받침해준다.
 - ④ 불확실한 상황에서 필요한 전략적 가치이다.
2. 다음 중 중첩성 등 가외성(Redundancy)의 효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14 군무원
 - ① 적응성
 - ② 신축성
 - ③ 안정성
 - ④ 능률성
3. 가외성(redundanc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 국회9급
 - ① 환경에 대한 대응성 향상
 - ② 행정비용 절감
 - ③ 책임한계의 모호성
 - ④ 조직 내 갈등·충돌의 우려
 - ⑤ 조직의 오류 가능성 감소로 인한 신뢰성 제고
4. 행정상 가외성의 효용성과 거리가 먼 것은? 2007 인천9급(하)
 - ① 행정의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
 - ② 행정의 유연성과 탄력성 증진
 - ③ 행정의 능률성 제고
 - ④ 정보의 도형화와 정확성의 확보
 - ⑤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행정체제의 적응성 증진
5. 가외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군무원
 - ① 동일한 행정기능을 여러 행정기관들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중복성(duplication)도 가외성에 해당된다.
 - ② 가외성은 조직의 유연성·융통성 및 행정의 신뢰성·안정성을 높인다.
 - ③ 가외성은 불확실성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 ④ 가외성은 목표에 대한 맹종성을 탈피하고 융통성을 부여하여 목표전환 현상을 악화시킨다.
6. 행정에 있어서 가외성(redundancy)을 통하여 조직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007 서울9급
 - ① 적응성 증진
 - ② 경제성 제고
 - ③ 신뢰성 확보
 - ④ 안정성 증진
 - ⑤ 창조성 제고
7. 행정에서 가외성을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2006 국회8급
 - ① 조직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 ② 조직의 능률성을 제고한다.
 - ③ March와 Simon이 최초로 주창했다.
 - ④ 위기상황과는 무관하다.
 - ⑤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정부기관에 전면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8. 행정의 가외성을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2006 선관위9급
 - ① 린드블롬(C. Lindblom)이 처음으로 주창하였다.
 - ②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 ③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운영에 필수적이다.
 - ④ 가외성은 위기관리와 관계가 멀다.
9. 가외성의 효용과 한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2007 대전7급
 - ① 가외성의 산술적 증가는 실패의 확률을 지수적으로 감소한다.
 - ② 조직의 기능들이 중복되어 있을 때 그만큼 적응성도 커진다.
 - ③ 조직의 동질적인 기능들이 중복적으로 엮어질 때 신뢰성은 증진되지만 창의성은 떨어진다.
 - ④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미미한 것에 대해서는 가외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10. 행정의 가외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소방간부
 - ① 중복적 조직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창조성과 개혁성이 일어난다.
 - ② 랜다우(Landow)는 권력분립, 연방제, 삼심제도 등에 가외성 현상이 반영되었다고 본다.
 - ③ 능률성을 향상시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한다.
 - ④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조직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증진한다.
 - ⑤ 조직의 갈등이나 대립 등의 역기능을 초래 할 수 있다.
11. 다음과 관련된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9 국가7급

○ 안전을 위하여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이중으로 설계하였다.

○ 정전에 대비하여 건물 자체적으로 자가발전시설을 갖추도록 하였다.

 - ① 창의성이 제고될 수 있다.
 - ② 수단적 가치보다는 행정의 본질적 가치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 ③ 행정체제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저하시킨다.
 - ④ 형평성과 상충관계에 있다.
12. 가외성(redundancy)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20 서울9급
 - ① 동등잠재성(equipotentiality)은 동일한 기능을 여러기관들이 독자적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랜다우(Martin Landau)는 권력분립, 계선과 참모, 양원제와 위원회제도를 가외성 현상이 반영된 제도로 본다.
 - ③ 창조성 제고, 적응성 증진 등에 효용이 있다.
 - ④ 한계로는 비용상의 문제와 조직 내 갈등 유발 등이 지적된다.

답 1. ③ 2. ④ 3. ② 4. ③ 5. ③ 6. ② 7. ① 8. ② 9. ③ 10. ③ 11. ① 12. ①

10 관료의 예산극대화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관료와 정치인은 쌍방독점의 관계이다.
- ② 관료는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
- ③ 이 모형은 1980년대 진행되었던 영국의 행정개혁을 적절하게 설명한다.
- ④ 월다브스키(Wildavsky)가 주장한 것으로 관료는 소속 부서의 예산규모를 극대화한다.
- ⑤ 관료는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교차하는 점에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려 한다.

해설

① (○) 니스칸넨(W. Niskanen)의 관료예산극대화(budget maximization) 가설에 따르면 관료는 공공서비스 산출을 공급독점하고, 국회의원·정치인 등 후원자(sponsor)는 그 산출물을 구매하는 수요독점의 지위를 지닌다. 그러나 관료는 정보능력·의제설정능력을 지녀 국회보다 우월한 지위의 '불균형적인 쌍방독점' 관계를 형성한다. 의회의 통제가 약한 행정부 우위의 불균형적인 쌍방독점적 예산과정에서는 재정지출 규모가 확대됨으로써 후생 측면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②⑤ (×) 정치인은 득표 극대화(재선)를 목표로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 정치인은 한계편익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교차하는 점(한계편익과 한계비용 일치 지점, 순편익 극대화 지점)에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려 한다고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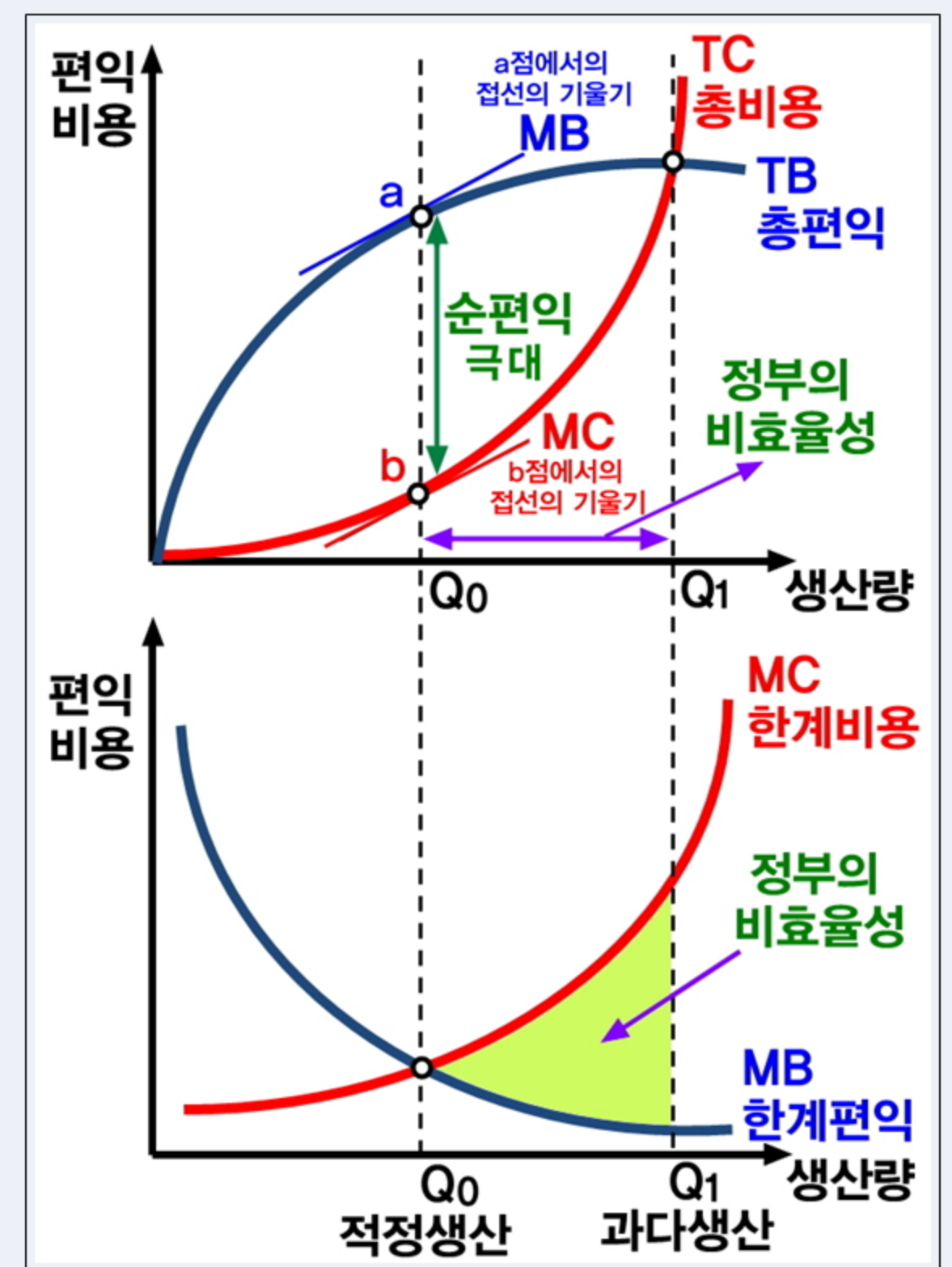
행위자	이기적·합리적 태도	공공재 생산규모의 최적수준 판단
정치인 (공공재의 구매자)	득표의 극대화(재선을 목표) → 국민 입장 반영한 공공재 구매	• 정치적 최적수준(political optimum) - 사회후생극대화 지점(최적 수준)에서 구매하려 함 - 순편익(=총편익 - 총비용) 극대화 수준 → 한계편익=한계비용
관료 (공공재의 생산·공급자)	관료 자신의 효용 극대화. 관료가 획득하는 예산 수입은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해야 한다는 제약조건 하에서 자기부처 예산의 극대화	• 관료적 최적수준(bureaucratic optimum) -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과다생산 - 순편익=0(총편익=총비용) → 한계편익 < 한계비용

③ (○) 1980년대 이후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추진된 대규모 예산감축과 민영화 등 신보수주의 정부개혁으로 Niskanen의 예산극대화 모형은 그 현실적 타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즉 예산극대화 모형의 핵심 논지인, 관료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예산증대를 시도하고 또 그 시도는 성공한다는, Thatcher에 의한 정부기능의 민영화와 책임운영기관화, Reagan, Clinton 행정부의 공공지출 감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후 Niskanen 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경험적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대다수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고, 더욱이 어떤 연구는 예산극대화모형의 주장과 배치되는 결과를 얻었으며, 이에 따라 보다 현실정합적인 새로운 관료태도모형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iskanen 모형을 대체할 구체적 관료태도모형을 구성하고자 하는 시도는 지금까지 소수에 그치고 있다. 주로 영국 학자들에 의하여 제시되고 발전되고 있는데, Dunleavy(1991)와 James(2003)의 관청형성 모형이 바로 그것이다. 관청형성모형은 관료들이 공적 결정시 사적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가정은 수용하나, 관료가 자기 부처의 예산을 극대화한다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모든 기관, 모든 관료가 모든 예산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종류(핵심예산, 관청예산 등), 관료 위치(고위직, 하위직)에 따라 다양한 이기적 행태가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④ (×) 니스칸넨(W. Niskanen)이 주장.

※ 니스칸넨(W. Niskanen)의 관료이익(예산)극대화 가설(budget maximization)

- ① 가정 : 관료는 공공서비스 산출의 공급독점, 국회의원·정치인 등 후원자(sponsor)는 그 산출물을 구매하는 수요독점의 지위. 그러나 관료는 정보능력·의제설정능력을 지녀 국회보다 우월한 지위의 '불균형적인 쌍방독점' 관계 형성.
- ② 효용극대화 : 정치인과 관료는 목적함수가 다르므로 효용극대화의 내용과 다름.
 - ① 정치인 : 재선을 목표로 사회효용[사회후생]을 극대화하려 하므로 순편익(=총편익 - 총비용)의 극대화 수준(한계편익=한계비용)인 Q_0 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려 함 - 정치적 최적수준(political optimum)
 - ② 관료 : 정치가들과 달리 자기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용보다 편익에 더 관심을 두므로 총편익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지점, 즉 순편익=0이 되는 Q_1 까지 생산을 늘리려 함 - 관료적 최적수준(bureaucratic optimum)
 ※ 관료의 예산극대화가 가능한 이유 : 관료 업무 성과의 계량적 측정 곤란, 관료의 독점적 업무 수행, 업무의 비용에 대해 의회가 정확한 정보 획득 곤란.
- ③ 과잉생산 : 관료가 산출하는 업무량이 많을수록 관료는 의회로부터 많은 예산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공공재의 산출량을 생산 가능한 최대수준까지 생산하게 되어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과다한 공공재를 산출하게 되는 낭비적 결과가 발생. 관료들의 예산극대화 노력이 불필요한 조직이나 정책 등의 유지나 확대를 가져오기 때문에 행정의 비효율성을 낳게 되고, 이로 인해 정부실패 발생.
- ④ 시사점 : 의회의 통제가 약한 행정부 우위의 불균형적인 쌍방독점적 예산과정에서는 재정지출 규모가 확대되어 후생 측면의 손실이 발생하며, 이를 통제하려면 입법부에 의한 통제 강화가 필요.



답 ①

[관련기출]

1. 니스칸넨(Niskanen)의 예산극대화모형(budget - maximization model)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1 지방7급

- ① 정치가는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가정한다.
- ② 정치가는 총편익과 총비용의 차이인 순편익이 최대가 되는 수준에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려 한다고 본다.
- ③ 관료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 경제인이라고 가정한다.
- ④ 관료는 한계편익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려 한다고 본다.

2. 니스카넨(Niskanen)의 예산극대화 이론과 던리비(Dunleavy)의 관청형성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국가7급

- ① 니스카넨(Niskanen)에 따르면 최적의 서비스 공급 수준은 한계편익(marginal benefit)과 한계비용(marginal cost)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 ② 두 이론 모두 관료를 자신의 이익과 효용을 추구하는 인간으로 가정한다.
- ③ 던리비(Dunleavy)에 따르면 관청형성의 전략 중 하나는 내부 조직 개편을 통해 정책결정 기능과 수준을 강화하되 일상적이고 번잡스러운 업무는 분리하고 이전하는 것이다.
- ④ 니스카넨(Niskanen)에 따르면 예산극대화 행동은 예산유형과 직위의 관계, 기관유형, 시대적 상황 등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3. 예산결정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관점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4 국가9급

- ① 본질적 문제해결보다는 보수적 방식을 통해 예산의 정치적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다.
- ② 니스카넨(W. Niskanen)에 의하면 예산결정에 있어 관료의 최적 수준은 정치인의 최적 수준보다 낮다.
- ③ 정치인과 관료들은 개인효용함수에 따라 권력이나 예산규모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 ④ 재원배분 형태는 장기균형과 역사적 상황에 따른 단기의 급격한 변화를 반복한다.

4. 예산결정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관점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4 국가9급

- ① 본질적 문제해결보다는 보수적 방식을 통해 예산의 정치적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다.
- ② 니스카넨(W. Niskanen)에 의하면 예산결정에 있어 관료의 최적 수준은 정치인의 최적 수준보다 낮다.
- ③ 정치인과 관료들은 개인효용함수에 따라 권력이나 예산규모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 ④ 재원배분 형태는 장기균형과 역사적 상황에 따른 단기의 급격한 변화를 반복한다.

답 1. ④ 2. ④ 3. ③ 4. ③

11

국채 우선 상환 이후 세계잉여금의 사용 순서를 다음 내용에서 옳게 연결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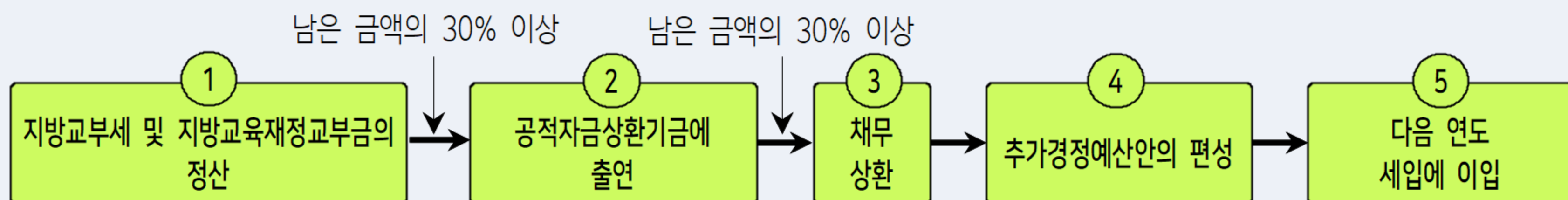
- ㉠ 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 ㉡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
- ㉢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
- ㉣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
- ㉤ 기타 채무(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국가 배상금 등) 상환

-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 ⑤ ㉡ ⇨ ㉠ ⇨ ㉤ ⇨ ㉢ ⇨ ㉣

해설

☞ 세계잉여금(세계순잉여금을 의미함)의 사용 우선순위

세계잉여금 = 세입수납액 - 지출된 세출액 = 초과세입액 + 다음 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 ㉡ 「국가배상법」에 따라 확정된 국가배상금
-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차입금의 원리금
-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

• 국가재정법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 ①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補填)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는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하여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다.
- ②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1.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2. 「국가배상법」에 따라 확정된 국가배상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다만,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답 ②

[관련기출] 우리나라 세계잉여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 국가7급

- ①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 ②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 ③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 ④ 사용 또는 출연은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답 ④

12 옴부즈만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 채택된 옴부즈만은 입법부 소속으로, 직무수행 상 의회의 간섭과 통제를 받았다.
- ② 옴부즈만에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은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한정된다.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옴부즈만이다.
-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를 통제 대상으로 삼는다.
-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직권조사권을 갖고 있어 고충 민원 신청이 없어도 사전심사와 구제가 가능하다.

해설

- ① (×) 스웨덴의 옴부즈만은 조직은 의회 소속이지만 직무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되며 업무에 대한 의회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는다.
- ② (×) 행정행위의 합법성(위법)뿐 아니라 합목적성(부당) 여부, 태만, 과실,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해서도 조사 가능(공직의 요구에서 벗어난 모든 행위가 대상).
- ③ (○) 스웨덴의 옴부즈만과 성격이 약간 다르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제도를 국가옴부즈만제도로 칭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①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둔다.
- ④ (×)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인 경우 고충민원을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고 이송이 부적절하면 각하할 수 있다.

• **동법 제43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⑤ (×) 옴부즈만은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조사권이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제도는 신청에 의한 조사만 인정되면 직권조사권은 없어서 사전예방적 구제에는 한계가 있다.

cf) 신청에 따른 조사 이후 조사결과에 처리에 있어서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조정이 가능하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조정) ① 권익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답 ⑤

[관련기출]

1.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2 경찰간부

- ①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이에 검찰이 공소제기하지 않을 경우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직권조사권과 사전심사권이 없다.
-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1 경정승진

- 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 신고가 가능하며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 ② 19세 이상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직권조사권, 사전심사권, 시정조치 권고권을 갖는다.
- ④ 부패신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뒤 관련 조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3.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4 경정승진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이에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외부통제수단으로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므로 직권에 의한 조사도 가능하다.	
③ 부패행위의 신고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4. 우리나라 옴부즈맨 제도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5 해경간부
①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신청에 의한 조사만 가능하고, 직권에 의한 조사는 불가능하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답 1. ④ 2. ③ 3. ② 4. ④

13 정책과정의 권력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고전적 엘리트이론은 ‘과두제의 철칙론’을 제시한다.
- 무의사결정은 지배 엘리트집단의 이익에 반하는 의제가 정책과정에서 채택되지 않도록 한다.
- 다원주의론에서 정책의 주도자는 경쟁하는 이익집단들이다.
- 하위정부모형은 행정관료, 의회 위원회, 이익집단 간의 갈등적 경쟁관계를 강조한다.
- 조합주의에서는 이익집단의 자율성이 제약된다.

[관련기출]

1. 정책네트워크 모형 중 하위 정부 모형과 이슈네트워크를 비교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회9급

	구분	하위 정부	이슈네트워크
①	결정과정에 접근	폐쇄적	개방적
②	정치적 제후	불안정적	안정적
③	이해관계	동맹적	경쟁적, 갈등적
④	문제해결	해결됨	종종 해결되지 않음
⑤	집단 참여	자발적	자발적

2.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5 국가7급

① 정책커뮤니티(Policy Community)란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집단이 비교적 제한적이고 정책결정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계속성을 지니는 경우이다.

② 하위정부는 모든 정책분야에 걸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관심이 덜하거나 영향력이 비교적 적은 분배정책 분야에서 주로 형성되고 있다.

③ 철의 삼각(iron triangle)은 하위정부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의회 상임위원회(분과위원회), 행정부처와 이익집단간의 관계가 통합성이 지극히 높으며, 일종의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여 사용되는 개념이다.

④ 이슈네트워크는 헤클로(H. Hecl)가 하위정부나 철의 삼각을 비판하기 위하여 제기한 개념으로서 미국에서 이익집단이 수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다원화됨에 따라 하위정부식 정책결정이 용이해졌다고 주장한다.

3.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1 지방7급

① 제 3종 오류를 방지하는 것이 정책문제 구조화의 핵심으로 간주된다.

② 주요 정책행위자들 간의 치열한 경쟁적 갈등관계는 철의 삼각(iron triangle)관계라고 불린다.

③ 정책문제를 정의하고 해석하는 과정은 다양한 결과에 이를 수 있는 애매하고 불투명한 과정으로 간주된다.

④ 정책행위자들은 실질적인 제약과 절차적인 제약 하에서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답 1. ① 2. ④ 3. ②

해설

- (○) • 고전적 엘리트 이론(19C말 ~ 20C초) : 정책에는 대중의 요구가 아닌 엘리트의 지배적인 이익과 가치가 반영된다고 봄. 엘리트는 수동적이고 무지한 대중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대중에게 영향을 미침. 사회는 엘리트계급과 피지배계급(대중)으로 구분되며 엘리트는 동질적, 폐쇄적, 보수적, 체제유지적이기 때문에 정책의 변화는 혁명적이기보다는 점증적임.
 - 파레토(V. Pareto) : The Governing Elite(통치엘리트), Circulation of Elites(엘리트의 순환)
 - 모스카(G. Mosca) : The Ruling Class(지배계층)
 - 미헬스(R. Michels) : The Iron Law of Oligarchy(과두제[寡頭制]의 철칙[鐵則]) : 소수가 지배하는 것은 필연적 법칙)
- (○) 신엘리트이론(무의사결정론) : 바흐라흐(P. Bachrach)와 바라츠(M. Baratz)는 R. Dahl의 다원주의를 비판하고 정치권력의 두 얼굴(two face of power)을 제시. 특정사회에서 지배엘리트는 그들의 이해관계와 일치되는 문제만 정책화하고(밝은 얼굴), 지배엘리트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은 정책의제화되지 못하게 방해·억압(어두운 얼굴)한다고 보고 후자를 무의사결정이라 함.
- (○) 다원주의론에서 정책은 다양한 집단들 간 협상과 타협의 산물이며, 집단 간 이익갈등을 정부가 공정·중립의 입장에서 조정한 결과로서의 균형으로 봄. 정책내용은 이익집단 간 상대적 영향력 정도에 따라 좌우된다고 봄.
- (×) 하위정부(Sub - government)·철의 삼각(Iron Triangle) : 미국의 정책과정을 설명하며 제시된 모형으로서 각 정책영역별로 정책과정의 비공식 참여자인 이익집단, 공식참여자인 의회 상임위원회(정당×), 행정부처(관료조직, 고위관료) 3자가 은밀하게 결탁한 장기적·안정적·호혜적인 동맹관계를 통해 상당한 독립성을 지닌 하위정부를 형성함으로써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 하위정부 참여자들은 경쟁적 갈등관계가 아니라,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협력관계를 형성하며 연계관계의 안정성과 응집성이 아주 높음.

하위정부, 정책공동체, 이슈네트워크의 비교

구분	하위정부(철의 삼각)	정책공동체	이슈네트워크(정책쟁점망, 이슈망)
행위자(actor ; 참여자)	이익집단, 의회 상임위원회, 행정관료	하위정부의 삼자 외에 전문가 추가 (제한된 멤버십)	정책공동체보다 행위자가 확대됨 (다양하고 이질적인 집단)
관료의 역할	특수이익집단 이익에 종속 공익과 이익집단의 이익 조정	관료의 적극적 역할	쟁점에 따라 주도적 역할 또는 방관자 역할
관계의 지속성·안정성	안정적·지속적	비교적 안정적(멤버십의 연속성)	불안정(일시적·유동적)
행위자간 연계 (linkages)	동맹관계	의존적·협력적 관계	경쟁적·갈등적 관계
정책네트워크의 경계	명확한 경계(폐쇄성)	←————→	약한 결합(공개적인 갈등 상황) 희미한 경계(개방성)

⑤ (○) 다원주의와 조합주의 비교

구분	다원주의	조합주의
정부관	국가는 수동적·중립적 역할(다양한 이익집단의 요구 수용)	국가의 능동적·적극적·비중립적 역할(국가이익 확대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사회개입)
주요행위자	이익집단(이익집단의 국가에 대한 투입기능 강조)	국가(국가의 이익집단에 대한 통제기능에 중점)
국가와 이익집단	국가의 개입 없이 자율적인 이익집단 결성 이익집단은 국가와 자율적 관계, 로비활동을 하지만 독립적 관계 개방적 협상	국가의 개입과 승인 하에 비자율적인 이익집단 결성 이익집단은 국가와 비자율적 관계, 편익을 주고받는 협력적 관계 폐쇄적 협상(정책결정이 폐쇄적 성격을 지님)
이익집단 간 관계	경쟁적·수평적 관계 경쟁을 통한 negative-sum game	비경쟁적(협력적)·위계적(계층적) 관계 협력을 통한 positive-sum game
이익집단의 행태	개별 집단의 이익 추구	사회적 책임·합의·사회적 조화 등의 가치도 중시
독점적 대표권	이익집단의 독점적 대표권 없음	이익집단의 독점적 대표권이 존재함(국가가 부여)
정책결정	다양한 이익집단 간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	정부와 이익집단 간 제도화된 합의에 의해 결정
이익집단의 의회접근도	높음	낮음

답 ④

14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합리모형은 분석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
- ② 점증모형은 치열한 정치적 협상을 통해 결정되므로 과거의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 ③ 최적모형은 양적 분석뿐만 아니라 질적 분석도 동시에 고려한다.
- ④ 쓰레기통모형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요소는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기회의 흐름이다.
- ⑤ 만족모형은 행정인이 아닌 경제인의 가정에 기초하여 제한된 합리성을 추구한다.

해설

- ⑤ (×) 만족모형은 포괄적·총체적 합리성을 지닌 경제인(economical man)이 아닌 제한된 합리성을 지닌 행정인(administrative man)의 가정에 기초한다.

합리모형과 만족모형의 비교

구 분	합리모형(이상적·규범적·연역적 모형)	만족모형(현실적·실증적·귀납적 모형)
정책결정자	경제인 - 전지전능, 포괄적 합리성, 완전한 합리성(완전 정보)	행정인 - 현실적 인간(인지능력의 한계), 제한된 합리성(불완전 정보)
합리성	객관적 합리성	주관적 합리성
대안탐색	모든 대안을 광범위하게 탐색	몇 개의 대안(만족대안을 찾을 때까지 순차적·무작위적 탐색)
결과예측	복잡한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결과를 예측(총체적 예측)	불확실한 상황을 단순화, 대안의 중요한 결과만 예측(부분적 예측)
대안선택	최적(optimum) 대안 - 최적화 기준, 전체최적화	만족할 만한(satisficing) 대안 - 만족화 기준, 부분최적화

답 ⑤

[관련기출]

1.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4 국회9급

- ① 만족모형은 의사결정자의 제한적 합리성을 강조한다.
- ② 점증모형은 정치적 합리성을 강조한다.
- ③ 혼합모형은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의 절충을 시도한다.
- ④ 쓰레기통모형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설명력이 높다.
- ⑤ 최적모형은 초합리성을 강조하며 합리적 사고를 포기한다.

2. 다음 중 정책결정모형과 그 내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2015 서울9급

- ① 쓰레기통모형 - 문제, 해결책, 수혜자, 선택기회의 흐름
- ② 만족모형 - 행정인(administrative man)
- ③ 조직과정모형 - SOP와 프로그램 목록
- ④ 최적모형 - 초합리성 강조

3. 정책결정모형 중 사이먼(Simon)의 만족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6 경찰간부
① 합리모형에서 가정하는 의사결정자는 경제인이고, 만족모형에서 가정하는 의사결정자는 합리성의 제약을 받는 행정인이다. ② 경제인은 목표달성의 극대화를 도모하여 모든 가능한 대안 중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지만, 행정인은 만족할 만한 대안의 선택에 그친다. ③ 경제인은 불확실성이나 불충분한 정보 등으로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나, 행정인은 동태적 상황을 고려하여 대안의 결과에 측을 시도한다. ④ 실제의 의사결정자는 모든 대안을 탐색하지 않고 몇 개의 대안만 탐색하며, 대안의 탐색은 무작위적이고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4. 사이먼(H. A. Simon)의 정책결정만족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군무원9급
① 사이먼(H. A. Simon)은 합리모형의 의사결정자를 경제인으로, 자신이 제시한 의사결정자를 행정인으로 제시한다. ② 경제인은 목표달성의 극대화를, 행정인은 만족하는 선에서 그친다. ③ 경제인은 합리적 분석적 결정을, 행정인은 직관, 영감에 기초한 결정을 한다. ④ 경제인은 복잡하고 동태적인 모든 상황을 고려하지만, 행정인은 실제 상황을 단순화시키고, 무작위적이고 순차적으로 대안을 탐색한다.	
5. 정책 관련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 소방간부후보
①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을 수정 보완해 약간 개선된 상태의 정책대안을 채택한다고 본다. ② 만족모형은 미래에 발생할 현상을 예측하고 모든 대안을 검토한 후, 가장 만족스러운 대안을 채택한다. ③ 쓰레기통모형은 정책문제, 문제의 해결책, 선택 기회, 참여자 등의 요소가 개별적으로 떠다니다가 우연한 계기로 교차되면 정책결정이 된다고 본다. ④ 최적모형은 기존의 계량적 분석뿐만 아니라 직관적 판단에 의한 결정도 중요하다고 본다. ⑤ 회사모형은 갈등의 준해결, 문제 중심의 탐색, 불확실성의 회피, 조직의 학습, 표준운영절차(SOP)의 활용 등을 특징으로 한다.	
6.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0 국가7급
① 만족모형은 정책결정자나 정책분석가가 절대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고, 주어진 상황 하에서 목표의 달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본다. ② 쓰레기통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상태' 속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흐름에 의해 정책결정이 우연히 이뤄진다고 보는 정책모형이다. ③ 최적모형은 정책결정을 체계론적 시각에서 파악하고 정책성과를 최적화하려는 정책결정모형이다. ④ 혼합모형은 합리모형의 이상주의적 특성에서 나오는 단점과 점증모형의 지나친 보수성이라는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으로 제시된 모형이다.	

답 1. ⑤ 2. ① 3. ③ 4. ③ 5. ② 6. ①

15 공무원 평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다면평가제도는 다수의 평정자로 인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 ② 도표식 평정법은 상벌의 목적에 이용하기 편리하다.
- ③ 행태기준 평정척도법은 행태에 관한 구체적인 사건을 기준으로 평정하며, 사건의 빈도수를 표시하는 척도를 이용한다.
- ④ 우리나라는 평정결과에 대해 소청할 수 없다.
- ⑤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통해 시험의 타당도를 측정할 수 있다.

해설

- ① (○) 상관(감독자)평정 방식에서 벗어나 더 다양한 평정자(부하, 동료, 민원인도 포함)가 평가하므로 상대적으로 상관평정보다 객관성·공정성을 높임.
- ② (○) 도표식평정은 피평정자를 평정요소별로 관찰하여 해당 평정등급을 표시하며 평정결과가 점수로 표시되므로 상벌목적에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 ③ (×) 행태관찰척도법에 대한 설명이다.
- ④ (○) 근무성적평정결과는 고충심사 대상은 되지만 소청심사 대상은 아님.
- ⑤ (○) 근무성적(기준치)과 시험성적(예측치)의 비교를 통해 기준타당도 측정 가능

답 ③

☞ 행태기준평정척도법과 행태관찰척도법

1. 행태기준평정척도법(BARS ; Behavioral Anchored Rating Scale)

의의	도표식 평정척도법 + 중요사건기록법 도표식 평정척도법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평정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제로 관찰될 수 있는 행태(중요 사건)를 서술적 문장으로 평정척도를 표시한 평정도표(행태적 길잡이)를 사용. 직무분석에 기초하여 직무(job)와 관련한 중요한 과업(task) 분야를 선정하고 각 과업분야에 대하여 가장 이상적인 과업행태에서부터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까지를 몇 개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마다 중요 행태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점수를 할당(중요 행태는 중요사건기록법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음).																
사례	• 평정요소 : 문제해결을 위한 협조성(평정대상자의 행태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난에 체크 표시) <table> <tr> <th>등급</th><th>행태 유형</th></tr> <tr> <td>() 7</td><td>부하직원과 상세하게 대화를 나누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내놓는다.</td></tr> <tr> <td>() 6</td><td>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상관에게 자문을 구하여 해결책을 모색한다.</td></tr> <tr> <td>() 5</td><td>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나 가끔 잘못된 문제를 초래한다.</td></tr> <tr> <td>() 4</td><td>일시적인 해결책으로 대응하여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td></tr> <tr> <td>() 3</td><td>부하직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린다.</td></tr> <tr> <td>() 2</td><td>문제해결에 있어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운다.</td></tr> <tr> <td>() 1</td><td>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인데 결정을 회피하거나 계속 미룬다.</td></tr> </table>	등급	행태 유형	() 7	부하직원과 상세하게 대화를 나누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내놓는다.	() 6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상관에게 자문을 구하여 해결책을 모색한다.	() 5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나 가끔 잘못된 문제를 초래한다.	() 4	일시적인 해결책으로 대응하여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	() 3	부하직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린다.	() 2	문제해결에 있어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운다.	() 1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인데 결정을 회피하거나 계속 미룬다.
등급	행태 유형																
() 7	부하직원과 상세하게 대화를 나누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내놓는다.																
() 6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상관에게 자문을 구하여 해결책을 모색한다.																
() 5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나 가끔 잘못된 문제를 초래한다.																
() 4	일시적인 해결책으로 대응하여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																
() 3	부하직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린다.																
() 2	문제해결에 있어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운다.																
() 1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인데 결정을 회피하거나 계속 미룬다.																

장점	평정척도는 피평정자(직무수행담당자)와 계선상의 관리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설계하므로 신뢰와 참여를 통해 이루어짐. 주관적 평가의 오류 가능성 최소화.
단점	동일 직무라도 과업마다 별도의 행태기준을 작성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듦. 어느 하나의 행태만 선택하라는 것은 인간행동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상호배타성을 전제로 하므로 설득력이 약함(인간은 바람직한 행태를 보일 때도 있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를 보일 때도 있기 때문임).

2. 행태관찰척도법(BOS ; Behavioral Observation Scales)

의의	행태기준평정척도법 + 도표식평정척도법													
	㉠ 행태기준평정척도법 처럼 평정요소별 행태에 관한 구체적인 사건·사례를 기준으로 평정하지만, 등급은 도표식평정척도법과 유사하게 사건의 관찰 빈도 수를 표시하는 척도를 구성하여 조직구성원의 주요 행태별 척도를 제시한 뒤, 해당 척도를 선택하게 하는 방법.													
	㉡ 행태기준평정척도법의 단점인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간의 상호배타성을 극복하기 위해, 행태별 척도를 제시.													
	㉢ 선정된 평정항목은 모두 직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함(직무에 능통한 전문가의 판단에 의지하게 되며, 시험의 내용타당성 확보와 유사한 논리).													
사례	• 평정요소 : 부하직원과의 의사소통													
	평정항목					등급(관찰빈도)								
						거의 관찰 못함		매우 자주 관찰						
	새 정책이나 내규가 시행될 때 게시판에 게시한다.					1	-	2	-	3	-	4	-	5
	주의력을 집중하여 대화에 임한다.					1	-	2	-	3	-	4	-	5
	지시사항을 전할 때에는 구두로 한 것을 다시 메모로 전달함으로써 확인한다.					1	-	2	-	3	-	4	-	5
	메모는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적는다.					1	-	2	-	3	-	4	-	5
	상부 지시사항을 즉시 전하지 않고 며칠 지나 전함으로써 일을 서두르게 만든다.					1	-	2	-	3	-	4	-	5
장점	평정요소와 직무와의 관련성이 높으므로 평정결과를 통해 평정대상자에게 행태변화에 유용한 정보를 환류시켜 줌. 도표식평정의 평정요소의 추상성을 해소하고 등급 간 막연한 탁월·우수·보통 등의 평가가 아니라 평정항목의 행동이 얼마나 자주 관찰되느냐를 기준으로 하므로 평정자의 주관성·임의성을 줄임.													
	단점	행태의 정확한 관찰이 곤란하므로 도표식평정에서의 등급 간 구분의 모호성과 연쇄효과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함.												

[관련기출]

1.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근무성적평정 방법은?

2008 선관위9급

-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기 위하여 직무분석에 기초하여 직무와 관련된 중요한 과업분야를 선정한다.
- 각 과업분야에 대하여는 가장 이상적인 과업행태에서부터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까지를 몇 개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 각 등급마다 중요 행태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점수를 할당한다.

① 행태기준 평정척도법 ② 도표식 평정척도법 ③ 행태관찰척도법 ④ 체크리스트

2.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근무성적평정 방법은?

2009 경북 소방직

- 직무성과와 관련이 있는 중요 행위를 사전에 나열, 그러한 행위를 얼마나 자주 하는가에 대한 빈도를 표시하는 척도를 만들어 평가한다.
- 평정요소별 행태에 관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건, 사례를 기준으로 제시하여 평정한다.
-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과의 상호배타성을 극복하고 피평정자에게 행태변화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평정의 주관성과 임의성을 줄일 수 있다.

① 행태기준척도법 ② 도표식평정척도법 ③ 행태관찰척도법 ④ 체크리스트법

3. 근무성적평정 방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3 경정승진

- ① ‘중요사건 기록법’은 근무실적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건들을 평정하는 방법으로 사실에 근거한 평가가 가능하지만 이례적인 행동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단점이 있다.
- ② ‘도표식 평정척도법’은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평정이 용이하고 등급의 비교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다.
- ③ ‘행태관찰척도법’은 직무성과와 관련이 있는 중요행위를 사전에 나열 그러한 행위를 얼마나 자주 하는가에 대한 빈도를 표시하는 척도를 만들어 평가한다.
- ④ ‘체크리스트평정법’은 평정요소에 관한 평정항목을 만들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질문항목이 많을 경우 평정자가 혼란을 갖게 된다.

답 1. ① 2. ③ 3. ②

16 인사행정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표관료제는 출신집단의 가치와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관료제 내부통제의 효과가 있다.
- ② 정실주의는 미국에서 처음 발달한 것으로 인사권자의 개인적 신임이나 친분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 ③ 실적주의는 인사행정을 소극적·경직적으로 만든다.
- ④ 직업공무원제는 전문행정가의 양성을 저해한다.
- ⑤ 엽관주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을 향상시킨다.

해설

- ① (○) 대표관료제는 행정통제 유형 중 비공식적 내부통제에 해당.

- ② (×) 정실주의는 영국에서 발달한 것으로 인사권자의 개인적 신임이나 친분관계도 인사기준이 된다. 미국의 엽관주의는 정치성(당파성·충성심)이 인사기준이지만 영국의 정실주의는 정치성 외에도 귀속(학연·혈연·지연 등)도 인사기준이 됨.

구분	기 준	시 기	신분보장	대량경질	공무원행동기준	실적제로의 전환
엽관주의 (미국)	정치성(충성심, 당파성)	19C 초 민주주의	신분보장 안 됨	전면경질 (정권교체시)	정당에 대한 충성	1883년 펜들턴법
정실주의 (영국)	정치성 + 귀속성(학연·혈연·지연 등도 고려)	17C 말 절대군주제	신분보장 됨 (생애직)	부분경질 (공석발생시)	주로 정치가(政治家) 개인에 대한 충성	1870년 2차 추밀원령

- ③ (○) 실적주의는 인사기능이 집권화·법제화됨에 따라 신축성을 결여한 채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상대적으로 유능한 인재의 유치라는 적극적인 측면보다는 부적격자의 제거라는 소극적 측면에 중점을 두게 됨.
- ④ (○) 계급제는 폐쇄형 임용으로 인해 외부의 유능한 전문인력 충원이 곤란하다. 계급제라는 공직분류체계상 전문행정가의 육성이 곤란하다(직업공무원 신규채용시 유능한 인재를 임용하지만 임용 후 승진임용은 폐쇄형에 의하므로 외부의 유능한 전문인력의 충원 곤란).
- ⑤ (○) 엽관주의에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당의 당원이 공직에 임명되므로 국민의사를 존중하는 민주통제가 강화되고, 책임행정 구현이 가능하며, 엽관제에 의해 임명된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에 비해 국민의 요구를 더욱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므로 행정의 민주성·대응성이 향상된다.

인사제도의 종류와 이념

인사제도	능률성, 자율성, 도구성·중립성	민주성·대응성·정치성	책임성	전문성	형평성
엽관주의	×	○	△	×	×
실적주의	○	×	×	○	△
직업공무원제	○	×	×	×	×
대표관료제	×	○	○	×	○

• 엽관주의는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당의 당원을 공직에 임용함으로써, 행정의 민주통제 강화와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료가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아닌 정당의 사병화가 됨으로써 국민에 대한 책임성 저하를 초래.

- 실적주의는 임용기회 면에서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한 수평적 평등을 확보하지만, 대표관료제는 사회집단의 인구구성비율 반영을 통해 사회적 약자 계층의 임용가능성을 보장하므로 수직적 평등을 확보할 수 있음.

답 ②

[관련기출]

1.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14 국가9급

- ㉠ 엽관주의는 실적 이외의 요인을 고려하여 임용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요인, 혈연, 지연 등이 포함된다.
- ㉡ 엽관주의는 정실임용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민주주의의 실천원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 ㉢ 엽관주의는 정치지도자의 국정지도력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정책의 실현을 용이하게 해 준다.
- ㉣ 실적주의는 정치적 중립에 집착하여 인사행정을 소극화, 형식화시켰다.
- ㉤ 실적주의는 국민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2. 엽관주의(Spoils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1 경찰승진

- ① 주로 학벌, 지연, 혈연과 같은 개인적 친분관계를 임용의 기준으로 삼는다.
- ② 오늘날은 직업공무원으로 하여금 시민들의 요구와 선호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게 만드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 ③ 1883년 미국의 펜들턴법(Pendleton Act)을 기회로 엽관주의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 ④ 행정의 능률성을 강화시키는 반면 행정의 민주성을 약화시키는 단점이 있다.

3. 다음 제시된 내용 중에서 엽관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못한 것으로만 바르게 나열한 것은?

2015 해경간부

- ㉠ 학자에 따라서는 미국에서 발달한 엽관주의(Spoils System)와 영국에서 발달한 정실주의(Patronage System)를 구분해서 정의하기도 한다.
- ㉡ 엽관주의는 행정이 복잡화될수록 적용가능성이 높다.
- ㉢ 엽관주의는 19세기 초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된 미국에서 발전했다.
- ㉣ 엽관주의는 정치적 책임의 확보가 곤란해진다.
- ㉤ 엽관주의는 선거를 통하여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선출직 지도자들의 직업공무원들에 대한 통제를 용이하게 해준다.
- ㉥ 행정의 전문성·능률성·안정성·계속성을 제고할 수 있다.
- ㉦ 오늘날 엽관주의는 종래와 같이 광범위하게 이용되지는 않으며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고위직이나 특별한 신임을 요하는 직위 등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4. 다음은 각국의 행정학 발달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2005 경북9급(1)

- ① 독일의 행정학은 프러시아에서 발달한 관방학을 바탕으로 경찰학과 행정법학(공법학)의 영향을 받았다.
- ② 미국은 정실주의로 인한 비효율과 부패개혁을 위한 정치행정일원론의 등장으로 행정학이 성립되기 시작되었다.
- ③ 영국은 관료제도 개혁을 시작으로 행정학이 발달하였으며 정부간 관계와 지방행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였다.
- ④ 프랑스는 17세기 경찰학을 바탕으로 법학의 도움을 얻어 행정학이 발전하였다.

5. 엽관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6 경찰승진

- ① 엽관주의는 19세기 초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된 미국에서 발전했다.
- ② 원래 임용권자와의 정치적 충성도,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라 공직에 임용되는 제도를 의미하였다.
- ③ 오늘날 엽관주의는 종래와 같이 광범위하게 이용되지는 않으며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고위직이나 특별한 신임을 요하는 직위 등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 ④ 엽관주의는 선거를 통하여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선출직 지도자들의 직업공무원들에 대한 통제를 용이하게 해준다.

답 1. ④ 2. ② 3. ④ 4. ② 5. ②

17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완성에 수년이 필요한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한정되어 있다.
- ②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③ 재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일반회계 예비비의 사용 절차에 준해 집행한다.
- ④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가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 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⑤ 국고채무부담행위 사항마다 행위연도와 상환연도 및 채무부담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해설

- ① (×) 계속비에 대한 내용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대상경비의 제한이 없음

• 국가재정법 제23조(계속비)

- ① 완성에 수년이 필요한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 ③ 기획재정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2항의 지출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②③④⑤ (○)

• 국가재정법 제25조(국고채무부담행위)

- ① 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위는 일반회계 예비비의 사용절차에 준하여 집행한다.
- ③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 및 상환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와

구분	국고채무부담행위	계속비
채무부담을 행하는 연도	대부분 초년도에 전액 채무부담	초년도 뿐 아니라 그 이상에 걸쳐 채무부담행위 가능
지출권한	채무부담권만 부여, 지출권한은 부여 받지 못함	채무부담권과 지출권한을 잠정적으로 부여 받음
대상경비	대상경비가 한정되지 않음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한정
이월 사용	다음 연도에 지급해야 하므로 다음 다음 연도로의 이월 불가능	미지급 연부액은 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체차이월 가능
준예산	준예산으로 지출 불가	준예산으로 지출 가능
장점	재원·사업의 탄력적 운영	재원의 안정적 확보
단점	차기 연도 재원 부담	고정적 경비화

답 ①

[관련기출]

1.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 경정승진

- ① 예산의 전용이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 예산도 이에 따라서 책임 소관이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 ②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및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은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계속비란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로서, 원칙상 5년 이내로 국한하지만 기획재정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 ④ 국고채무부담행위란 법률, 세출예산금액, 계속비 범위 안에서 정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 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 소방간부

- ① 예산의 전용은 입법과목인 장·관·항 사이의 상호 융통으로 반드시 국회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예비비는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계상한 것이다.
- ③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 ④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이다.
- 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이후 사업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 편성하는 것이다.

답 1. ③ 2. ①

18 목표관리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분권 및 참여적 요소를 중시한 예산제도이다.
- ② 종합적인 5개년 사업계획에 기반하여 예산을 수립하여 집행한다.
- ③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계획예산제도의 특성을 배합한 것이다.
- ④ 조직 내적 관점에서의 목표에 따른 산출량에 초점을 둔다.
- ⑤ 조직구성원들이 결과에 대해 책임을 느끼게 하는 조직문화를 배양할 수 있다.

해설

- ② (×) 목표관리예산의 계획기간은 부분적이고 단기적(주로 1년)이다. 종합적인 5개년(장기적) 사업계획에 기반한 예산수립은 PPBS와 관련된다.
- ④ (○) 조직 내부적으로 설정된 목표의 달성을 강조하는 목표(goal)·산출(outputs)지향적 예산제도이다.

답 ②

19 회사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인적 차원의 만족모형을 조직 차원의 의사결정에 적용한 모형이다.
- ② 회사를 상이한 개성과 목표를 가진 개인의 연합체로 정의한다.
- ③ 조직환경을 매우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④ 회사는 내부 갈등을 상급자의 권위를 바탕으로 통합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 ⑤ 부분 최적화를 통한 국지적 합리성을 강조한다.

해설

- ① (○) 회사모형(연합모형, 타협모형 coalition model)은 고전파 경제학에서 기업이 합리모형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전제하는 데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기업의 목표는 이윤만이 아니라 다른 목표들도 지니며 어느 것이 목표이든 그것의 극대화가 아니라 만족할 만한 수준의 달성만 있으면 충분하다. 회사모형은 개인 차원의 의사결정모형이 집단차원에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예 합리모형) **개인적 차원의 의사결정 중 만족모형을 조직 차원의 의사결정에 적용시킨 집단적 의사결정모형**이다.
- ② (○) 회사모형은 조직을 유기체로 보는 합리모형과 달리 회사조직을 서로 다른 개성과 목표를 가진 독립적으로 다양한 구성원들(하위조직)의 연합체(coalition)라고 가정함(조직을 반독립적인 하위조직의 연합체로 가정)
* cf) 조직을 '상호 독립적인 개인적 행위자(정치적 참여자)들의 집합체'로 보는 앨리슨(G. Allison)의 **관료정치모형(Bureaucratic Politics Model)**과는 구별할 것
- ③ (○) **불확실성의 회피·통제** : 회사모형은 환경을 유동적인 것으로 파악하며, 따라서 대안이 초래할 결과 역시 불확실한 것으로 본다. 합리모형에 의하면 조직은 대안 결과에 대한 예측과 기대치의 계산 등에 의하여 불확실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반면, 회사모형에 의하면 실제조직은 장기적인 전략보다는 급박한 문제부터 해결하려 하면서 **단기적인 환류(feedback)정보에 따라 단기적인 대응책을 수립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회피하며, 환경에 제약을 가하거나 환경과 타협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통제**(예 거래관행 수립, 계약 체결, 카르텔형성하는 등 예측 가능한 결정절차를 선호한다).
- ④ (×) **협상을 통한 의사결정과 갈등의 준해결** : 조직은 단일 유기체가 아니라, 상이하고 독립된 목표를 가진 반(半)독립적 하위조직 간 연합체이며 상이한 목표추구에 따른 갈등이 발생한다. 회사의 하위조직들간에 생겨나는 갈등·모순되는 목표들은 하나의 차원이나 기준으로 통합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갈등은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 준해결에 머문다. 지배적인 상위목표가 없는 상태에서 갈등의 해결방법이나 통합적 기준이 없으므로, 갈등의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하고 전체목표라는 단일기준에 의해 해결되기보다는 하위조직 상호 간 협상을 통해 잠정적으로 해결되는 상태에 머물게 된다.
- ⑤ (○) **국지적 합리성(local rationality = sub - optimization[부분최적화])** : 하위조직은 하위부서의 문제와 목표에만 전념. 조직의 전체적 일관성이 약하며 일관성을 엄밀하게 요구하지 않으므로 국지적인 결정들이 상호 불일치되어도 이를 용인하면서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면 의사결정을 하게 됨. 갈등 해결과정에서 손해를 본 하위조직에게는 조직의 여유(slack)자원을 지급하여 보상.

답 ④

[관련기출]

1. 정책결정모형 중에서 회사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 국가9급

- ① 회사조직이 서로 다른 목표를 지닌 구성원들의 연합체(coalition)라고 가정한다.
- ② 연합모형 또는 조직모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 ③ 조직이 환경에 대해 장기적으로 대응하고 환경 변화에 수동적으로 적응한다고 한다.
- ④ 문제를 여러 하위문제로 분해하고 이들을 하위조직에게 분담시킨다고 가정한다

2. Cyert와 March의 회사모형(firm model)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5 국가9급

- 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에 무엇을 선호하는지 불분명하며, 목표와 수단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기술도 불명확하다.
- ② 환경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예컨대 거래관행을 수립하거나 장기계약을 맺는 등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 ③ 문제상황의 복잡성과 동태성 때문에 조직이 직면하는 불확실성은 대안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예측을 극히 어렵게 하므로, 단기적 환류에 의존하는 의사결정절차를 이용하여 불확실성을 회피하려고 한다.
- ④ 회사의 하위조직들간에 생겨나는 갈등·모순되는 목표들은 하나의 차원이나 기준으로 통합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갈등은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 갈등의 준해결에 머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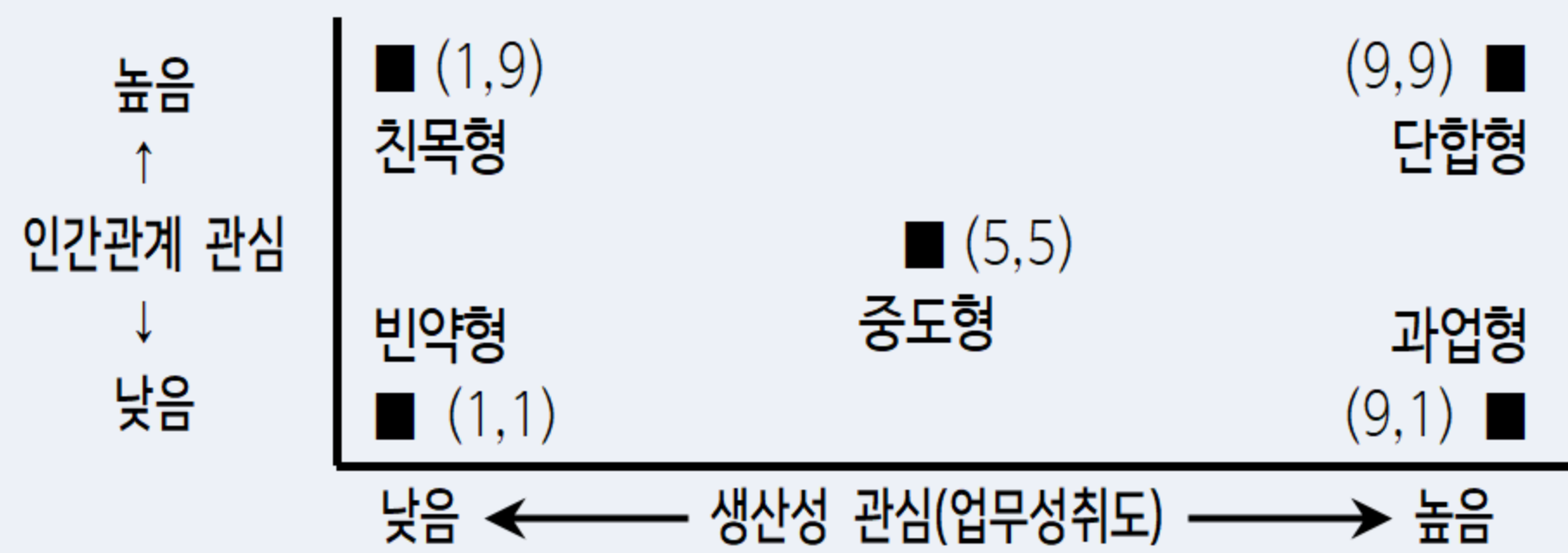
답 1. ③ 2. ①

20 리더십의 행태적 접근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블레이크(R. Blake)와 모턴(J. Mouton)은 사람중심과 생산중심의 2가지 행태 모두 중간 수준인 유형을 가장 성공적인 리더로 본다.
- ② 화이트(White)와 리피트(Lippitt)는 권위형, 민주형, 자유방임형으로 리더 유형을 구분하였다.
- ③ 미시간 대학의 연구에서는 리더의 행태를 생산중심과 직원중심으로 구분하였다.
- ④ 리더십은 특정 행태에 기인하므로 훈련을 통해 습득 가능하다고 본다.
- ⑤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연구에서는 구조주도행동과 배려행동을 중심으로 4가지의 리더십 유형을 제시하였다.

해설

- ① (×) R. Blake와 J. Mouton의 관리망(Managerial Grid, 리더십 그리드) 이론 : 상황에 따라 각각 효과적 지도유형이 될 수 있지만, 사람중심과 생산중심의 2가지 행태 모두 높은 수준(9,9)인 단합형(팀형)을 모든 조직에서 개발해야 할 지도자의 이상형으로 봄. 단합형(팀형)은 종업원의 자기발견과 생산성 향상의 연결을 도모함.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과 조직구성원들의 상호의존관계와 공동체 의식을 강조함으로써 조직목표달성을 위해 헌신하도록 유도함.



리더십의 본질에 대한 행태론(행동유형론)(behavioral approach)

- ① Michigan 대학, Likert : 직무(생산)중심, 직원중심형(생산성과 부하의 만족감을 높이는 데 효과적)
- ② Lewin, Lippitt & White : 권위형, 민주형(생산성과 사기가 모두 높아 가장 효과적), 자유방임형
- ③ Ohio 대학 : 구조설정 vs 배려기준 4가지 유형. 높은 구조설정능력과 높은 배려행태일 때 가장 바람직.
- ④ Blake와 Merton : 관리망(생산 vs 인간) - 무관심형, 친목형, 과업형, 중도형[절충·타협형], 단합형(팀형)으로 구분. 지도자의 이상형은 단합형(9,9).

답 ①

[관련기출]

1.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7 지방7급

- ① 피들러(Fiedler)는 리더십 유형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부하의 성숙도를 중요시한다.
- ② 번스(Burns)의 거래적 리더십은 영감, 개인적 배려에 치중하고 조직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십이다.
- ③ 하우스(House)의 참여적 리더는 부하들과 상담하고 의사결정 전에 부하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한다.
- ④ 블레이크와 머튼(Blake & Mouton)은 직원지향적 리더십이 가장 이상적인 리더십 유형이라고 규정한다.

2. 리더십 이론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경찰간부후보

- ① 피들러(Fiedler)의 상황론이 제시하는 상황변수에는 리더와 부하와의 관계, 리더의 공식적 권한, 과업구조의 특성이 있다.
- ② 변혁적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과 같이 보상을 기반으로 추종자들을 통제하기 보다는, 평등·자유·정의 등 고차원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추종자들의 의식을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려 한다.
- ③ 행태이론은 모든 상황에 효과적인 리더의 행태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 ④ 블레이크와 모튼(Blake and Mouton)의 관리망(managerial grid) 연구에서는 과업형이 가장 효과적인 리더십 행태로 나타났다.

3. 리더십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9 경쟁승진

- ① Lewin, Lippitt, White는 리더십 유형을 직원중심형과 생산중심형의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 ② 피들러(Fiedler)는 리더십 유형을 과업지향적 리더와 인간관계 지향적 리더의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 ③ 하우스와 에반스(House & Evans)는 리더십 유형을 지시적, 지원적, 성취지향적, 참여적 리더십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 ④ 블레이크와 머튼(Blake & Mouton)은 리더십 유형을 무관심형, 친목형, 과업형, 타협형, 단합형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4. 조직발전(O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7 서울7급

- ① 조직 전체의 변화를 추구하는 계획적·의도적인 개입방법이다.
- ② 감수성훈련은 동료 간·동료와 상사 간의 상호작용을 진작시키기 위한 실제 근무상황에서 실시하는 기법이다.
- ③ 블레이크와 머튼(Blake & Mouton)은 과업형 리더를 가장 효과적인 관리유형으로 꼽았다.
- ④ 변화관리자의 도움으로 단기간에 급진적 조직변화를 추구 한다.

답 1. ③ 2. ④ 3. ① 4. ①

21 매트릭스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능구조의 기술 전문성과 제품사업부의 혁신을 동시에 꾀한다.
- ② 조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기적으로 확보·배분·이용한다.
- ③ 구성원들이 다양한 경험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 ④ 이원적 조직구조로 인한 상호작용 증가로 조직 내 갈등 수준을 완화한다.
- ⑤ 조직이 변화하는 환경에 좀 더 유연하게 적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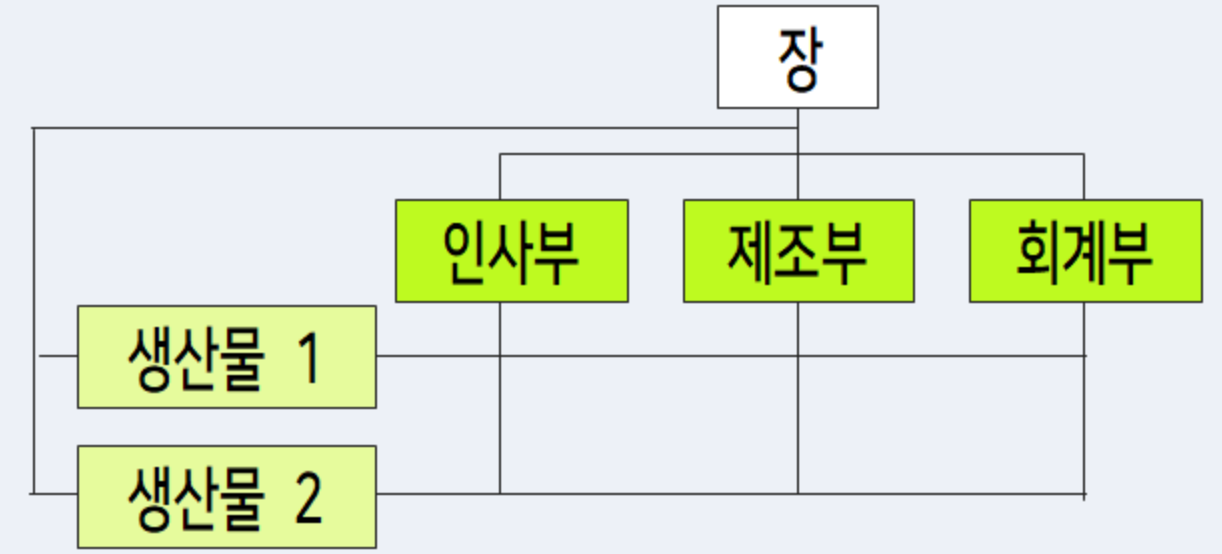
해설

④ (×) 매트릭스구조는 두 상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받는 이중권한체제로 인하여 **조직구성원의 정체성 약화와 역할갈등을 초래**하고 권한과 책임한계가 불명확하다. **기능부서와 사업부서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신속한 결정이 곤란하다.

☒ 매트릭스 구조(matrix structure ; 행렬조직, 복합구조, 주형(鑄型)조직)

1. 의의

- ① 기술적 전문성(기능구조의 특성)과 신속한 대응성(사업구조의 특성)이 동시에 강조됨에 따라 등장한 조직구조로서 전통적인 계서적 특성을 갖는 수직적(종적)인 기능구조(직능조직)와 수평적(횡적)인 사업구조(프로젝트조직)를 **화학적(물리적으로)**으로 결합시켜 신속성을 확보하도록 한 혼합적·이원적 구조의 상설조직.
- ② 기능부서 통제권한은 수직적으로, 사업부서 간 조정권한은 수평적으로 흐르는 2원적 권한체계. 조직구성원은 기능과 사업의 양 조직에 중복 소속되고 기능적 관리자(주로 인사)와 프로젝트 관리자(주로 사업) 간에 권한이 분담됨



2. 장·단점

장점	단점
① 신규직원 채용이나 장비의 구매 없이도, 기존의 전문요원 및 장비를 공유하게 되므로 인적·물적 자원 활용의 효율성 이 제고되며 특수사업의 추진이 용이함. ② 잦은 대면과 회의를 통해 조직단위 간 정보흐름(의사소통) 을 활성화시켜 예상치 못한 문제의 파악과 새로운 해결책 모색에 기여. ③ 구성원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전문기술을 개발하면서 넓은 시야와 목표관을 가질 수 있고 자아실현욕구를 충족시켜 동기부여에 유리 . ④ 신속성·적응성이 요구되고 불안정하고 변화가 빈번한 환경에서 적절한 대응 과 복잡한 의사결정 가능. 새로운 환경수요 발생시 별도로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없어 신속한 대처 가능. ⑤ 각 기능부문과 사업부문 간 조정, 조직원의 협동작업으로 상호 이해와 통합 확보. ⑥ 경직화되어 가는 대규모 관료제조직에 융통성 부여.	① 두 상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받는 이중권한체제로 인하여 조직구성원의 정체성 약화와 역할갈등을 초래 하고 권한과 책임한계가 불명확함. ② 기능부서와 사업부서 간 갈등을 초래 할 수 있으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신속한 결정이 곤란함 . 조직 간 할거주의가 있을 경우 조정이 곤란. ③ 조직관리의 이중권한체계, 권력다툼 등으로 인해 기존 1원적 명령복종 체계보다 객관성·예측가능성이 떨어짐 . ④ 두 상관과의 갈등이 불가피하며 상·하간 부드러운 인간관계가 형성되기 어렵고, 다양한 인간관계 기술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며 권력균형 유지에 많은 노력이 요구됨. ⑤ 조직구성원이 매트릭스 구조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업무처리의 혼선을 초래.

답 ④

[관련기출] 다음 중 조직구조의 대안적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5 경찰간부

- ① 환경변화에 좀 더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조직구성원들에게 기능 구조보다 포괄적인 목표관을 갖게 해 주는 것은 사업구조 모형이다.
- ② 모호한 조직경계로 인해 조직의 정체성이 약해 응집성 있는 조직문화를 갖기 어렵고 조직원의 충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수평 구조 모형이다.
- ③ 기능구조는 안정적 조직 환경과 일상적 조직기술이 중요하고 부서 간 팀워크가 적게 요구되는 기계적 구조에 가깝다.
- ④ 매트릭스 구조는 기능부서와 사업부서 간의 갈등이 높아 이를 해결하는 데 요구되는 시간과 노력의 낭비가 불가피하다.

답 ②

22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978년 미국의 연방공무원개혁법에 의하여 최초로 도입되었다.
- ②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 ③ 광역시의 행정부시장과 도의 행정부지사는 고위 공무원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정부의 정책결정과 연관된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고위직 인사의 질적 관리를 위하여 도입되었다.
- ⑤ 고위공무원단의 직위는 개방형직위, 공모직위, 기관(부처) 자율직위로 구분된다.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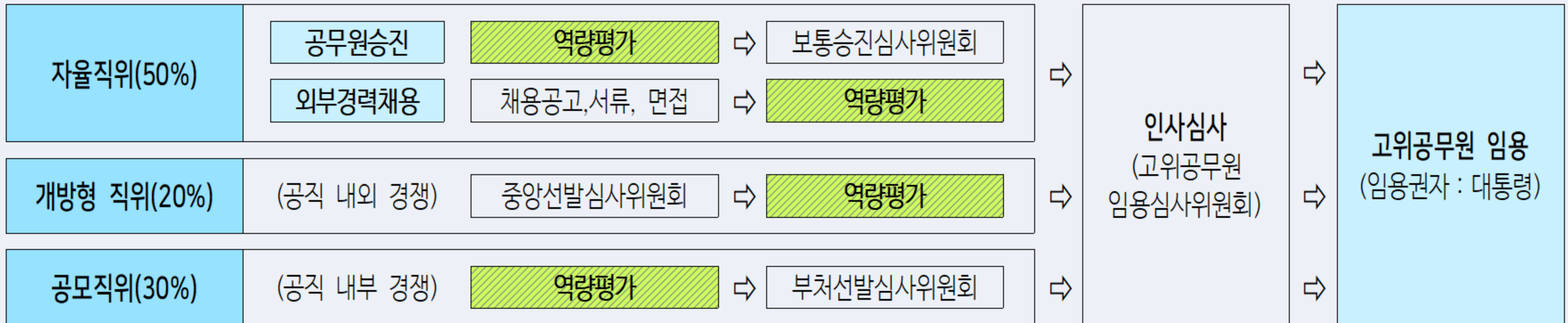
- ① (○) 미국 : SES(Senior Executive Service) 1978년 「공무원제도개혁법」. 카터(Carter) 정부. 직위분류제에 계급제(직업공무원제)적 요소를 가미
 영국 : SCS(Senior Civil Service) 1996년 Major 정부. 계급 폐지, 하나의 관리계층집단으로 통합. 피라미드형 계급구조에 따른 전문성 저하 문제 극복
 우리나라 : 노무현 정부 시기 2006년부터 중앙정부의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고 성과관리와 책임을 강화하는 고위공무원 단제도를 시행하여 신분보다 직무 중심의 직위분류제 요소를 대폭 강화. 계급·직급폐지, 직무등급 적용.

②⑤ (○) ☒ 고위공무원단 임용 및 인사관리

임용방법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은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승진임용 , 전보 의 방법에 의함.
임용권	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공무원도 임용제청 가능). ② 대통령은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장관에게 위임 가능(신규채용, 면직, 해임, 파면 등은 위임 불가).
충원비율 (개방과 경쟁)	30%는 공모직위로서 타 부처에 개방, 20%는 개방형직위 로서 민간에게도 개방, 50%는 부처자율직위 로서 해당 부처 소속 공무원 또는 타 부처 소속 공무원으로 제청 가능(개방형과 공모직위는 경쟁방식 임용).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후보자 교육과정을 마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로서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됨.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	인사혁신처장은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지도관 포함)을 대상으로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함. 실제 정책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문제해결형 교육인 액션러닝방식으로 운영.

역량평가	역량평가는 고위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려는 사람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거나 전보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승진임용 또는 전보 전에 실시(예외적으로 역량평가 없이 임용 가능한 경우도 있음)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일반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할 경우 후보자 중 근무성적·능력·경력·전공·인사고료기간·인품·적성 등을 고려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임용예정 직위의 2~3배수 인원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 후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 임용 제청.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	① 인사혁신처장 소속. 위원장(인사혁신처장) 포함 5~9인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은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 중 인사혁신처장이 지명·위촉 ② 고위공무원의 채용심사·적격심사,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심사 담당
전보의 제한	전보시 최근 1년간 근무성적평정에서 최상위등급의 평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 없이 재직 중인 직위 보다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낮은 직위로 전보할 수 없음

☞ 고위공무원단 직위별 충원방식



③ (×)

☞ 고위공무원단 대상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다음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 공무원의 군(群)(단, 특정직은 타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에만 해당. 예) 외무공무원)

-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 행정부 각급 기관(감사원 제외)의 직위 중 ①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감사원은 고위감사공무원단을 별도로 운영)
-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①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 일반직공무원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 일반직공무원
㉠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를 의미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의 기획업무담당실장 ㉢ 도의 농업기술원장	㉠ 부교육감(고위공무원단인 장학관으로도 임용 가능) ㉡ 서울특별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의 기획업무담당실장

④ 그밖에 다른 법령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

☞ 고위공무원단 대상 구별

대상임	국가공무원 중 실·국장급의 일반직·별정직 공무원과 특정직 중 외무공무원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 ⇒ 고위공무원단인 일반직 국가공무원(부교육감은 고위공무원단인 장학관 가능)
대상 아님	• 지방공무원 • 정무직 국가공무원 • 특정직 국가공무원 중 소방·경찰·군인 등	•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 ⇒ 지방공무원 • 특별시 행정부시장 ⇒ 정무직 국가공무원 • 특별시 정무부시장 ⇒ 정무직 지방공무원

④ (○)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및 관리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실·국장급 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며 성과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역량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우리나라 고위직 인사제도는 계급과 연공서열 위주, 부처 내부 위주의 폐쇄적 인사운영과 형식적 성과관리로 공직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을 통해 고위공무원 인사시스템을 혁신하여 정부 경쟁력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답 ③

[관련기출]

1.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바르지 않은 것은?

2008 부산 소방직(수정)

-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은 고위공무원단이 아니다.
-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기초로 적격심사를 거쳐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
- 부산광역시 부교육감은 고위공무원단에 해당한다.
- 정무직 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제도이다.

2.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0 국회9급

- 과거의 1~3급의 계급을 폐지하고 직무와 직위에 따라 폭넓은 인사가 가능한 제도이다.
- 국장급 이상 일반직, 별정직, 외무공무원 그리고 부지사, 부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 고위직이 포함된다.
- 민간부문과 경쟁하는 개방형 제도와 함께 타 부처 공무원과 경쟁하는 직위공모제가 실시된다.
- 고위공무원단의 도입목적은 고위직의 개방 확대 및 경쟁 촉진, 신분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고위직 책임성 확대 등이다.
- 성과목표, 평가기준 등에 대해 계약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는 직무성과계약제가 시행된다.

3.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국가7급(인사·조직론)
① 미국이 고위공무원단(Senior Executive Service, SES)제도를 도입한 배경에는 직위분류제가 지니는 폐쇄성을 극복하고, 고위관리자들의 시각을 넓히려는 의도가 있었다.	
②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배경에는 계급제 틀과 연공서열의 관행을 벗어나 개방과 경쟁을 통해 임용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③ 국가공무원법 상 고위공무원단은 감사원 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	
④ 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성과계약등 평가에 의한다.	
4. 우리나라의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가9급(하)
①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서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확실적인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②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 직원 등은 경력직 공무원 중에서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③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에서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④ 고위공무원단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5.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1 지방9급
① 국가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 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② 개방형임용 방법, 직위공모 방법, 자율임용 방법을 실시한다.	
③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부지사, 부교육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④ 원칙적으로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한다.	
6.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08 국가9급
①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 3급 이상 공무원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 고위공무원단의 직위는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 부처자율직위 등의 형태로 운영된다.	
③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모두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직무등급에 의하여 구분된다.	
④ 고위공무원단은 직업공무원제도와 다른 제도로서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	

답 1. ① 2. ④ 3. ③ 4. ④ 5. ③ 6. ②

23 신제도주의 접근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제도주의는 행태주의와는 달리 제도를 사람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독립변수로 본다.
- ②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사례중심의 귀납적 연구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 ③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가 일단 형성되면 방향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경로의존성을 주장한다.
- ④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인간의 표준화된 행동 코드가 제도 내에 배태되어(embedded) 있다고 본다.
- ⑤ 최근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내생적 요인과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이 제도변화의 중요한 요인임을 인정한다.

해설

- ① (○) 행태주의는 사회구조로부터 독립된 인간의 태도 및 행태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반해, 신제도주의는 행태주의를 비판하면서 인간 행위에 대한 사회구조와 제도적 제약에 주목하였다. 신제도주의는 제도와 행위자의 관계에 대한 상호작용적 시각에서 접근한다. 제도는 행위를 제약하는 독립변수이기도 하면서, 행위자에 의해 변화되는 종속변수이기도 한 것이다. 제도가 행위를 제약하고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독립변수이지만, 한편으로 행위자들의 행동의 여지가 존재하며 의도된 행위들에 의해 제도가 다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면에서 종속변수로도 간주될 수 있다
- ② (×) 합리적 선택의 제도주의는 개인의 선호(이기적 합리인)의 외생성을 전제로 하여 개인이 주어진 선호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의도적·자발적으로 제도를 형성하는 전략적 행동을 연구하므로 연역적 접근법에 해당된다. 사례연구와 비교연구는 역사학적 신제도주의에서 사용하는 귀납적 접근법이다.
- ③ (○) **제도의 지속성과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 의도하지 않은 결과(unintended consequence)**
 - ㉠ **경로의존성**: 제도가 한 번 형성되면 사회환경 변화와 새로운 기능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을 띠며, 미래의 선택과 변화 방향을 제약. 그 결과 한 국가제도의 역사발전은 일정한 경로를 가지며, 새로운 투입이 발생해도 경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와 유사한 선택을 하는 '경로의존성'이 나타남(제도의 자기 강화와 긍정적 피드백).
 - ㉡ **비효율적·비합리적 제도의 인정**: 특정 정책 또는 경로가 한 번 선택되면, 나중에 문제 해결에 더 효율적이며 기능적인 제도가 있더라도 기존 제도가 폐지되지 않고 지속되는 경향이 있음(불합리한 제도의 지속 이유 설명). 새로운 환경에 유연하게 변화하지 못하고 과거의 모습을 유지하려 하므로 새로운 시점에서의 문제해결에 역기능적으로 작용하고 비효율성을 초래하기도 함. 결국 제도란 주어진 상황에 가장 적합하게 기능하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원래 의도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비효율성·비합리성을 인정.
- ④ (○) **제도적 환경과 배태성(embeddedness)**
 - ㉠ **제도적 환경**: 조직 외부에서 존재하는 기술, 경제, 문화 등 모든 것을 의미하며, 조직의 인지 범주와 정당성을 제공하는 원천. 개인은 사회규범을 고려하며 행동하므로 결과의 경제적 합리성이 떨어지더라도 사회관계에서 정당성이 있는 행동을 취함. 제도가 제공하는 판단 기준의 영향 아래 개인들이 자신의 선호를 발견할 수 있게 됨.
 - ㉡ **배태성**: '어떤 현상의 발생원인이 되는 고유한 속성'으로 인간의 인지과정과 행동결정에 대해 사회적 관계의 내용과 구조에 의한 일종의 제약(눈치, 규범, 관습, 문화 등).
- ⑤ (○) 최근에는 신제도주의의 하위 분파 간 통합적 접근을 하려는 일련의 연구 경향들이 있는데, '내생적 제도변화 이론'도 그러한 경향성을 반영한 이론 모형이다. 내생적 제도변화 이론은 그 내부에 다양한 관점들이 있고 그 설명방식도 전문적이고 복잡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공통된 결론은, 다른 사회현상과 마찬가지로 제도변화를 설명함에 있어서도 '구조와 행위', 또는 '거시와 미시'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합모형은 제도변화를 설명함에 있어 환경적 맥락(거시)과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미시)을 모두 고려한다. 통합 모형에서 환경은 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제도적 동형화),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환경의 행위자에 대한 영향은 '긍정적·부정적 환류의 고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제도변화를 위한 기회뿐만 아니라 제도변화를 제약하는 효과를 가지기도 한다. 그러나 환경이나 행위자의 제도에 대한 관계는 '일방향적 영향관계'가 아니라 '양방향적 영향관계'에 있다. 즉, 제도가 환경이나 행위자에 영향을 미쳐 향후 제도변화를 제약하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제도가 행위자의 선호를 바꾸는 '환류 효과'뿐만 아니라 제도가 정치의 지형을 바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유산'도 있다.

답 ②

[관련기출]

1. 신제도주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2011 경찰간부

① 합리적 선택의 제도주의는 사례연구와 비교연구를 통하여 효율적이지 못한 제도는 도태된다는 이론을 전개하였다.

② 역사적 신제도주의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개인의 선호체계는 주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③ 신제도론적 접근방법은 행정부·입법부·사법부 등 제도 간의 관계에 관해 법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④ 역사적 제도주의가 제도의 중단면적 측면을 중시하면서 국가 간의 차이를 강조한다면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횡단면적으로 국가 간 또는 조직 간 어떻게 유사한 제도의 형태를 취하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2. 다음 내용의 설명에 해당하는 행정이론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8 서울경채9급

제도는 일단 형성되면 방향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경로를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 기존의 제도는 새로운 환경에 유연하게 변화하지 못하고 과거의 모습을 유지하려 한다.

① 역사적 제도주의 ② 사회학적 제도주의 ③ 생태주의적 제도주의 ④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답 1. ④ 2. ①

24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세목으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광역시 - 지역자원시설세

② 시/군 - 담배소비세

③ 도 - 레저세

④ 자치구 - 재산세

⑤ 특별/광역시 - 등록면허세

해설

⑤ (×) 등록면허세는 도세나 자치구세이다.

☒ 지방세의 종류(과세주체별)

과세주체	보통세(9개)	목적세(2개)	
광역시자치단체	특별시세·광역시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민세*주1),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주2) 취득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기초자치단체	시·군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주3) ×	×

• 주1) 광역시의 자치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점을 감안하여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을 자치구세로 함. 주민세 개인분만 광역시세.

• 주2)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5.3%(21% x)를 재원으로 함. 시·군·자치구에 납입·안분되는 지방소비세액은 시·군·자치구세로 함

• 주3) 특별시의 자치구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재산세의 도시지역분을 특별시세로 함. 주택·건축물·토지 재산세는 특별시와 공동과세.

• 광역시의 군 지역에서는 도세 항목을 광역시세로 함(☞ 등록면허세). / 특별자치도세와 세종특별자치시세에는 전체 지방세가 포함됨.

•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해야 함.

답 ⑤

[관련기출]

1. 지방세의 구조를 볼 때 특별시세·광역시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004 서울9급(2)

① 담배소비세 ② 지역자원시설세 ③ 주민세 ④ 자동차세 ⑤ 등록면허세

2. 국세 또는 지방세가 서로 옳지 않게 연결된 것은?

2013 행정사

① 국세 -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 등록면허세, 재산세

③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④ 제주특별자치도세 -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⑤ 경상남도 창원시세 - 재산세, 자동차세

답 1. ⑤ 2. ③

2022년 소방간부후보 행정학 23

25 「공직자윤리법」에 포함되지 않는 공무원 윤리 사항인 것은?

- 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 ② 이해충돌방지의무
- ③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 ④ 재산 등록 및 공개
- ⑤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해설

⑤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내용이다.

☒ 행정윤리의 내용(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규율)

법적 타율적 규범	헌법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7조 1항). * 충성의 의무를 헌법상 의무(헌법에 규정된 의무 x)로 분류하기도 함
	국가공무원법	① 성실의무, ② 복종의무, ③ 친절공정의무, ④ 비밀엄수의무, ⑤ 청렴의무, ⑥ 품위유지의무, ⑦ 종교중립의무, ⑧ 선서의무, ⑨ 외국정부의 영예 등 규제, ⑩ 직장이탈 금지, ⑪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⑫ 정치운동 금지, ⑬ 집단행위 금지 * 징계 및 징계부가금을 규정.
	공직자윤리법	① 이해충돌방지의무, ② 재산등록 및 공개, ③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인도, ④ 퇴직공직자 취업제한(3년) 및 행위제한, ⑤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① 부패행위신고(내부고발)의무 및 부패행위신고자 보호, ②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5년), ④ 공직자의 청렴의무 * 국민감사청구, 부패유발 요인 검토, 공무원행동강령의 근거, 검찰에의 고발과 재정신청 등 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① 공정·청렴한 직무수행, ② 직무수행 관련 공평무사한 처신 및 직무관련자 우대·차별 금지, ③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와 부정청탁의 신고, ④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수수금지품등의 신고, ⑤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⑥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①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 받지 않고 직무의 공정·청렴한 수행, 직무수행 관련 공평무사한 처신과 직무관련자 우대나 차별 금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청렴한 직무수행 곤란시 직무수행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② 신고 및 제출 의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③ 제한 및 금지 행위(㉦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행정적 자율적 규범	기타 개별법	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고위공직자의 병역사항 신고·공개) ②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공무원범죄를 통한 불법수익 추적·환수) ③ 공직선거법(선거범죄자 임용제한)
	추상적 규범	공무원헌장(2016. 대통령훈령. 기존 공무원윤리헌장을 대체)
	구체적 규범	공무원행동강령(2005. 대통령령)

답 ⑤

[관련기출]

1. 다음 중 '공직자윤리법'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5 서울7급

- ① 이해충돌 방지 의무
- ② 정무직공무원 등의 재산등록 의무
- ③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 ④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2. 다음 공직자윤리법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19 경쟁승진

-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 ㉡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 이해충돌 방지 의무
- ㉣ 품위 유지의 의무
- ㉤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 ① ㉠, ㉢
- ② ㉠, ㉤
- ③ ㉡, ㉢
- ④ ㉡, ㉣

3.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가 지녀야 할 윤리를 확립할 목적으로 제정된 우리나라의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포함하고 있지 않은 내용은?

2012 국가9급

- ① 내부고발자 보호
- ② 재산등록 및 공개
- ③ 선물신고
- ④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답 1. ④ 2. ① 3. ①